

경제 정책 하면

나라경제

2011
nara.kdi.re.kr

b

이달의 이슈

금융보안, 이대로 좋은가

인터뷰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집중토론

美 신용등급 전망 하락, 어떻게 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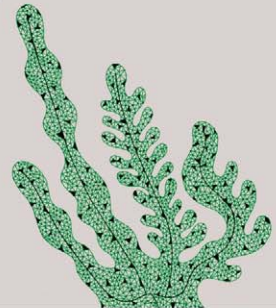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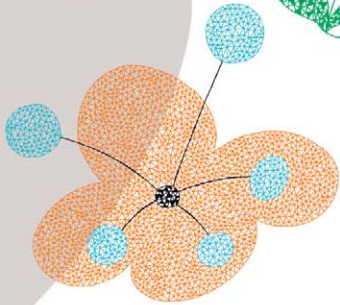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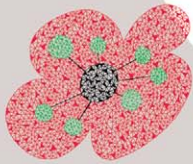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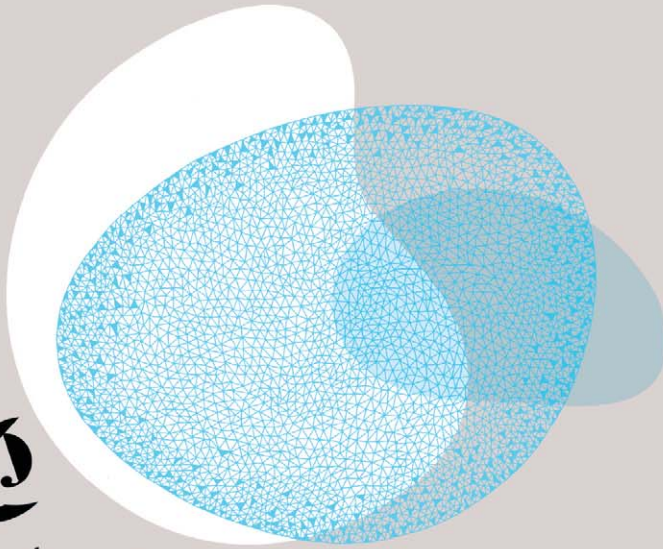
특집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융합으로 사고하고, 녹색으로 승부한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2012.5.12 - 8.12
EXPO 2012 YEosu KOREA
The Living Ocean and Coast



Official Partners



Official Sponsor



Official Supplier



93일간의 지구촌 바다축제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을 노래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을 기원하는
지구촌 바다축제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박람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기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93일간)
장소 |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규모 | 참가국 100여 개국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인생의 모든 것은 ‘대위법’

미하일 바흐친, 「도스토예프스키의 시학」

‘타인의 나를 긍정하는 것, 이 타인의 나를 객체가 아니라 ‘또 다른 주체’로 상정하는 것. 그래서 ‘사람 속의 사람’을 동시에 발견하는 것. 이것은 20세기 인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를 이룩한 러시아 비평가 미하일 바흐친(1895~1975)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서 발견한 심미적 원칙이었다. 톨스토이 대화체의 모놀로그적인 유아론(solipsism)의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분해되고 일탈한 ‘또 다른 인간’과 그들의 다양한 ‘이질적 목소리들’을 주인공-나의 의식 한가운데 산포하는 폴리포니(polyphony)의 다성악(多聲樂)과 대위법(對立法)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국민음악과 글린카가 ‘인생의 모든 것은 대위법’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흐친은 이 같은 새로운 예술적 사고가 바로 도스토예프스키 창작의 골격이라고 말하고 있다. 라스콜리니코프, 소냐, 뭉시킨, 이반 카라마조프, 알료샤 등과 같은 그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 같은 다성악적 소설의 으뜸화음들이었다.

미하일 바흐친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에서 발견한 폴리포니의 현상학은 1960년대 중반 불가리아 출신의 구조주의 문학비평가 줄리아 크리스테바와 츠베탕 토도로프에 의해 서구에 번역 소개되면서 이른바 ‘바흐친 산업’의 기반을 전 세계적으로 다지게 된다. 1929년 소비에트 정권하에서 러시아어로 쓰인 「도스토예프스키의 시학」은 1970년대 들어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됐고, 바흐친에 관한 논문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저널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출판되기 시작했다. 바흐친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발견한 다성악과 대위법 이론은 헤겔의 관념에서처럼 정신적 정반합의 과정과 통일성의 지향을 따르는 것이 아니



도스토예프스키

이질적인 타자의 목소리들을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하나의 ‘대화’ 상대로 극화하던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원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가난한 사람들과 지하생활자들이 체험하던 삶의 이중적 모순에서 비롯됐다.

라, 서로 모순적인 목소리들이 병렬적으로 동시에 공존하고 서로가 서로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휴머니즘의 원리로 평가됐다. 더욱이 바흐친의 문예이론은 도스토예프스키 이외에도 프로이트와 언어철학, 마르크스주의 사회학과 미학, 민중문화와 가톨릭 세계의 카니발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던 까닭에 -토도로프의 말대로-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철학적 인류학’으로 상찬받기도 했다.

한편 이타성과 주체의 동시적 공존 가능성을 제시하는 바흐친의 세계관은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 민중문화」(1965)와 같은 저술 속에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민중들의 삶에 녹아 있는 해학과 웃음 그리고 패러디와 그 로테스크한 이미지로 확장된다. 하지만

기존 사회의 모든 상징적 위계질서를 ‘거꾸로’ 뒤집는 이러한 민중들의 역설적 세계관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상정했던 다성악과 대화성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인 타자의 목소리들을 나의 의식 속에서 마치 하나의 ‘대화’ 상대로 극화하던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원리는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가난한 사람들과 지하생활자들이 체험하던 삶의 이중적인 모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내면의 모순, 그것은 다성악이면서도 동시에 오이디푸스적인 운명의 형식이라는 것을 도스토예프스키와 바흐친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박민정



이덕형

성균관대 러시아어문학과 교수

1961년생 프랑스 미셸 드 몽테뉴보르도 3대학 슬라브어문학박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역사철학부 수학. 경희대 조교수 역임. 저·역서로 「러시아 문화예술의 천년」, 「죽음의 집의 기록」,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 민중문화」 외 다수가 있다.



특집 |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융합으로 사고하고, 녹색으로 승부한다!

- 14 한국경제 기적 이을 신성장동력 10대 프로젝트
최태현 국무총리실 산업정책관
- 16 신성장동력을 소득 4만달러 시대 견인차로!
이동욱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장
- 18 신성장동력 금융 강화로 실물부문 육성 뒷받침
홍두선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 20 신성장동력 끌어갈 '사람' 키우는 데 주력
성기억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장
- 22 "전기차, 성장동력 삼으려면 정부부터 멀리 보야"
김규홍 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관리실장
- 24 신성장동력 선점 놓고 지구촌 '불꽃 경쟁'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장
- 26 건강하고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장석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센터 소장

인터뷰

- 08 "문화예산 재정 대비 2% 확충 시급하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담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경제정책해설

- 42 서비스산업 선진화 다시 속도 낸다
윤성욱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 44 2015년 디자인 경쟁력 세계 7위로 도약
홍수경 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 사무관
- 46 FTA 활용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총괄기획팀장
- 48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 50 불안한 '액티브X' 대체 적극 추진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 52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추진
정도현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장

지방시대

- 54 동해안권, 관광·에너지의 '블루파워벨트'로 거듭난다
김문연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





집중토론

- 36** 美 신용등급 전망 하락,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종만 국제금융센터 수석연구위원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연중기획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 82** 사회적기업 규모 키우려면 금융이 핵심
 장지연 SOPOONG 대표
- 84** 시장·민간 부문 통한 자원조달 활성화돼야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책 그 후

녹색인증제

- 78** 녹색인증으로 녹색성장 옥석 가린다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 79** “녹색금융과의 연계고리 강화할 것”
 권기성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사무관
- 80** 녹색기술인증 후 매출 수직상승
 최홍복 (주)에코데이 대표
- 81** 참여기업 확대 위해 전방위적 홍보를
 김재하 서울예술대 디지털아트학과 교수

그들은 바쁘다

- 56**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녹색국가 대한민국’ 우리 손으로!
 이재범 연구사
- 59** 탄소 ‘Zero’에 도전한다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세계는 지금

- 28** 경제불황기에 나타나는 카르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용수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 31** 중국경제 내실 다질 ‘12차 5개년 계획’
 김명신 KOTRA 상하이 KBC 차장

이달의 이슈

금융보안, 이대로 좋은가

- 62** 금융보안 IT예산 ‘5% 룰’, 대부분 미달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기자
- 64** “금융과 보안을 모두 아는 인재가 없다”
 김덕수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이사(CTO)
- 65** IT운영의 내실화, 각 조직의 숙제
 서춘석 신한은행 IT개발본부장
- 66** 금융 선진국,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성 모두 고려
 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68** 금융보안, 경영자 인식 제고 ‘급선무’
 금융보안연구원 교육홍보팀
- 70** 민관 합동 TF 통해 근본적 금융보안 대책 마련할 것
 권한용 금융감독원 IT감독국 부국장
- 72** “사람에 의한 보안관리가 핵심”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
- 74** 보안을 확대하는 문화부터 바뀌어야
 박창규 금융보안연구원장



칼럼

- 03 천천히 읽기**
인생의 모든 것은 '대위법' - 「도스토예프스키의 시학」
이덕형 성균관대 러시아어문학과 교수
- 34 나라 밖 경제**
아프리카 新중산층의 부상
안기련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 35 외신이 본 한국경제**
코스피지수 연초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강지은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 60 유정아의 소통의 기술**
사과하지 않는 그 남자의 소통
유정아 방송인/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연구원
- 85 미래와 세상**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회장
- 86 나라경제 인사이트**
초과이익공유제, 무엇을 들여다보아야 하나?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88 It's App**
“밥 맛 떨어지는 스마트폰 앱”
정현수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부 기자
- 89 행복한 중소기업 - (주)후이즈**
휴머니즘과 IT가 만나다
오기철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부장
- 90 수수께끼 서양미술사**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그네’
정석범 미술사학자
- 92 세미나 - 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해외 싱크탱크와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해야”
신지원 나라경제 인턴기자
- 94 그길을 걸었다 - 경주시 남산**
옛 신라 불교의 숨결을 느끼다
이용한 작가
- 98 시평**
다른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나라경제는 KDI와 14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나라경제

2011. 6 [제22권 6호 통권 247호]

발행 편집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편집인	현오석 KDI 원장 박철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고일동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간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정보실장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신민식 정책관리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이근재 기초과학정책과장 외교통상부 최철규 통상기획홍보관 행정안전부 조봉업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박상호 홍보담당관 지식경제부 전용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최중균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김영훈 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재정담당관 국토해양부 윤성원 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김윤수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김진홍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이진민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실
편집장 취재·편집기자	이재열 유성임, 안선경, 권기대, 표초희
배포	김경숙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6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전화	02-958-4656
팩스	02-3295-0744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11년 5월 31일(매월 말일 발행) 제22권 6호(통권 247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 라 04859호)
기사 문의	02-958-4634
광고 문의	02-958-4614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656
구독료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인쇄	(주)성우애드컴 사진 이래스튜디오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
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INCELY TREASURES

European Masterpieces 1600-1800 from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영국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소장품 특별전
**바로크·로코코 시대의
공정 문화**

2011.
5.3 - 8.28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National Museum
of Korea

www.baroque2011.com

Exhibition organized by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Soutflok | © Victoria and Albert Museum / V&A Image



1958년 경기도 양평 生
 성균관대 사회학과,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
 1980년 전국총학생회부활 준비위 상임위원장
 1993년~1998년 대통령 비서관
 1998년 미 조지타운대 객원연구원
 2000년~현재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2002년 아시아태평양 문화다양성수호 국제의원연대 의장
 2004년 국회 개혁특별법위 위원
 2009년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 특별위 위원장
 2010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2010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장
 2011년~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문화예산 재정 대비 2%
 확충 시급하다”

때 _ 2011년 5월 23일 오후 5시 30분
곳 _ 장관 집무실(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대담 _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취임 100일이 지났다. 그간의 소회는?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를 감시·견제하던 내가 이제는 반대 입장이 되고 보니 무한책임이랄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정책 집행자로서 주어진 과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상당하다. 예전에는 현장에서 이런저런 건의를 하면 정부한테 ‘하십시오’ 하거나 ‘왜 안하느냐’ 하고 다그쳤었는데 웃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들이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고 “이건 이래서 저건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다 이해해 주신다는 점이다. 감사할 따름이다.

지역 갈등, 종교 갈등, 세대 갈등에 이념적 갈등까지 우리 사회의 갈등지수가 매우 높다. 문화부 수장으로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과거 십여년간 문화라는 한길을 걸어오면서 절실히 느낀 점이 있다면 ‘문화의 힘은 강하다’라는 것이다. 이념과 국가와 종교와 언어가 달라도 ‘문화예술로 승화되고 탄생’ 하면 공감과 감동 속에서 서로 관점이 비슷해지는 것을 보아왔다. 이렇듯 문화는 계층과 지역, 이념과 언어를 초월해 하나로 승화시키고, 통합시키는 위대한 힘과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통합적 기능을 많이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즉 문화예술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한다. ‘문화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문화 향유는 있는 사람들의 배부른 얘기라는 인식이 많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부 대책은?

경제적·육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문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위 문화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는 물질적 생존 외에 국민의 행복을 배려하는 문화 복

지가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는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 제도를 운용하면서 이들 취약계층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예산이 374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나 장애우들의 경우 이 제도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제는 직접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추진하려 한다. 문화 프로그램을 맞춤 제작해 그 분들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공연하는 것이다.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문화회관과 예술단체 간 전속화 작업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자리잡으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대부분 문화회관을 갖고 있지만 그 활용률은 약 23%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지자체가 전속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고, 그 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속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전속단체와 협력해 무료공연을 무대에 올리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나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을 비롯해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닌가.

예술인복지는 오랜 기간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아직 제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말씀처럼 문화예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가치를 생각하면,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09년 ‘예술인복지법’을 발의했고, 현재 법안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이 법이 조속히 제정돼 예술인들이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법·제도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 같다.

물론이다.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게 있다면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이다. 장관 취임 후 ‘대국민 업무보고’를 추진하고,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특히 문화

Interview

예술 분야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문화예술의 발전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과 창의적인 인재들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창의적 인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토양을 만들고, 문화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서비스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장관 취임 이후 '문화재정 2% 확충'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문화·예술 사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비야흐로 '문화의 세기' 아닌가. 특히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는 이 시점에서는 문화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25%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약 85조원에 이르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1년 예산은 3조4천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문화재정이 정부재정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 선박·자동차·철강·IT·반도체와 같은 국가 주력산업에는 재정 대비 2~7%를 투입했다. 예산편성자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생각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내 생각에 이런 작업은 다른 어느 곳보다 KDI와 『나라경제』가 해야 한다고 본다(하하).

문화재정 확충의 구체적인 논거는 무엇인가?

문화·체육·관광은 사회통합적 가치, 외교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교육적 가치, 행복적 가치(복지적 가치) 등 5가지 가치를 만들어낸다. 또한 문화예산은 생산적 복지예산으로 기존 복지예산과는 다르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문화바우처 예산의 경우, 사회 소외계층에 지원된 이후 이들의 공연관람을 통해 예술인에게 재투자된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이 개선되면서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 확대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문화적 만족도, 즉 행복지수를 높여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생산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문화재정을 예산의 2%까지 확충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다. 또

콘텐츠,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다른 산업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콘텐츠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10억원당 19명(2007년)이지만 제조업은 9명(2008년)에 불과하다. 문화재정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에서 돌아온 날은 국민이 환호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마련과 치밀한 논리 구축, 외교적 활동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옳은 지적이다. 현재 국가 간 문화재 반환 문제는 국제법상 강제수단이 미비해 정치적·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러나 문화재를 보유한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 법과 국민정서를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이다. 이에 정부로서는 문화재의 환수·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문화재청 내에 '국외문화재팀'을 신설하고, 문화재 환수활동을 위한 민간기구인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의 설립을 지원하려 한다. 이 재단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한계를 보완해 문화재 환수활동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문화재 불법유출이 확인될 경우 꼭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IOC 평가단 실사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진전 상황은?

지난 2월 IOC 평가단의 평창 현지실사 후 3월 국제스포츠기자연맹(AIPS) 총회(서울)와 오세아니아올림픽위원회(ONOC) 총회(뉴칼레도니아), 4월 스포츠어코드(런던)에서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동계스포츠에 대한 우리나라의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 올림픽 전문 매체 *Around the Rings*(미국)에서 발표하는 비드인텍스에서 평창은 2위(2010년 3월 15일 발표)에서 1위(2011년 3월 16일 발표)로 올라섰다. 또한 평창은 지난 5월 10일 발표된 IOC 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 보고서에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평창 유치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입장에서 솔직히 우리가 다른 지역

“

지난 10년간 문화재정이 정부재정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화 시대 선박·자동차·철강과 같은 국가 주력산업에는 재정 대비 2~7%를 투입했다. 모두들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생각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다 특별히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독일 뉘른은 동계스포츠의 발상지나 마찬가지인 도시다. 그런 곳과 비교해 무엇을 가지고 평량이 더 낮다고 할 수 있는가. 다만 우리의 열정은 더 뜨거울 수 있겠다. 그런데 자꾸 국내 언론이 마치 다 된 것같이 접근해서 걱정이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건의 실수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을 잘 해왔다. 3단계 시험도 잘 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랬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금물이다. 상대국에서는 국내 언론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언론들이 좀 더 검허하고 신중히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경기를 치르기 위해 건설된 대형 경기장들이 대회 이후 수익을 내기는커녕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월드컵,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한 후 유산으로 남겨진 대형 경기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한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경기장의 수익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운영 중이다. 실제로 상암축구경기장의 경우 대형마트, 영화관 등 수익시설을 설치해 흑자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경기장명칭권 임대(올림픽역도경기장), 매장구성설계(서울상암축구경기장), 문화센터·스포츠교실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 창출 모델을 개발해 이들 시설이 수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 필요한 대형 경기장은 가급적 기존 시설을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신설이 불가피한 경기장에 대해서는 사후 활용대책을 꼼꼼히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 1천만명을 향해 가고 있지만, 양적 확대에 맞춰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선진화·고도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다.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은?

과거 정책방향이 양적인 팽창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양적·질적 동반성장을 목표로 할 것이다. 우선 관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숙박·가이드·음식 및 쇼핑 등의 질적 성장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한국방문의 해’(2010~2012년)를 맞아 외국인 환대 서비스를 강화할 것

Interview

이다. 외국인들이 따뜻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갖고 귀국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대한민국이 되게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한국 관광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저가 방한상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한편 고품격 관광상품을 보급하려 한다. 특히 관련 규정 위반 여행사에 대해서는 전담여행사 지정 해제 및 전담여행사 지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가이드 역량강화교육 및 단기실무교육을 강화하고, 관광가이드도 특수형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급 또는 일비가 보장될 수 있게 여행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팝(K-Pop) 등 한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류를 더욱 확대하고,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 등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얼마 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앞에서 300여명의 현지 한류팬들이 'SM타운 라이브월드투어' 추가공연을 요구하는 플래시몹 시위를 벌였다. 영국에서는 지난 2월 '제1회 런던 케이팝의 밤' 입장을 위해 영국 10대 청소년들이 한국문화원 앞에서 200m 이상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10년 전 드라마를 통해 시작됐던 한류가 이제는 장르도 다양해지고 지역도 확장되고 있음을 느낀다. 문화부 수장으로서 정말 가슴 뿌듯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신한류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글, 한식, 태권도,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넓혀나가고, 해외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인적 교류를 포함해서 상호 문화적 공감대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쌍방향 중심으로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을 통한 한류확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디지털영상, 융합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디지털 한류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한류스타 중 하나인 탤런트 현빈이 얼마 전 해병대에 입대해 큰 화제를 모았다. 장관께서도 해병대를 만기전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병대 대선배로서 현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현빈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경우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것이 24세 때였다. 그 나이도 늦은 편이었는데 현빈은 29세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현빈 입대 이후 그의 부친과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다. 부친은 현빈이 평소에도 완벽주의자라고 말하더라. 현빈은 사격훈련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등 훈련 성적도 최상이었다고 보도되지 않았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완벽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해병대 선배로서 현빈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어떻게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줬다.


'베스트 드레서'로 뽐혀 패션쇼 무대에 오르기도 하셨다. 부담스러운 점은 없나? 옷 잘 입는 비결은 무엇인가?

조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웃음). 지난해 말 '베스트 드레서'를 뽑는 한 시상식에서 정치인 부문 상을 운 좋게 수상했다. 그 자리에서 워킹도 해보았는데, 이젠 옆에서 자꾸만 베스트 드레서, 베스트 드레서 하나까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오히려 걱정이다(하하). 별다른 패션 비결은 없고, 코디는 스스로 하는 편이다.

최근 읽은 책이나 감상한 연극, 영화 등에서 『나라경제』 독자와 국민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선 책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쯤 와 있는지, 선진 일류국가가 되려면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준 『Mission 10만달러(매경)』를 추천하고 싶다. 영화로는故 이태석 신부의 아프리카 의료·봉사 활동을 담은 <울지마 톤즈>가 감동적이었다. 세상을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이 영화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봤으면 한다.

퇴임 이후 국민들의 기억 속에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은가.

문화를 진정 사랑했고, 문화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며, 문화 예술인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던 장관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융합으로 사고하고, 녹색으로 승부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미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17개의 신성장동력을 발표했다. 그리고 재정지원과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인력과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도 전기차, 스마트십(Smart Ship),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그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10개 신성장동력 과제를 선정, 정책역량을 집중해 육성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추진 3년차, 『나라경제』는 정책담당자에게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고 바람직한 신성장동력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한국경제 기적 이을 신성장동력 10대 프로젝트



최태현
국무총리실
산업정책관
mildtony@hanmail.net

한 국경제는 세계경제에 유례가 없는 짧은 시
간에 괄목한 만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
뤘다. 1970년대 10.2%, 1980년대 9.8%, 19
90년대 6.3%, 2000년 이후 3.9% 등 중화학공
업, 철강과 조선산업, IT산업 등 각 시대별로 산업
의 중심을 발 빠르게 전환하면서 성장을 이어왔
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세계경
제의 흐름을 미리 읽고 착실하게 대비해 산업에서
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덕분일 것이다.
정부도 산업의 흐름에 맞게 민간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 마련과 적절한 지원책을 병행해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 속에 우리 경제의
성장여력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2008
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앞으로 우리 경제
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요구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경제를 세계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특히 젊은 세대가 꿈을 갖
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기 위해,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야심차게 준비·추진해왔다.

새로운 10년의 트렌드는 '융합'과 '녹색성장'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년의 트렌드는 융합
(Convergence)과 녹색성장(Green Growth),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독립적으로 구분돼 왔
던 산업 간 경계가 급속하게 허물어지고, 전 세계
적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

그동안 민간기업의 투자와 사업추진,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이 뒷받침된 결과 현재 일부 신
성장동력 분야에서 시장이 빠르게 열리고 있
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장
의 요구가 큰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
하기 위해 3년 이내에 성과창출이 가능한 10
대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다. 정부는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융합과
녹색성장의 기반을 닦아나간다는 목표하에 민간전
문가와 기업을 중심으로 심층적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2009년 1월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과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인력
과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왔다. 신
성장동력에 올해까지 총 8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
입하고, 융합화에 대응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
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9개의 핵심법령을 선
제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연구중심대학(WCU) 등
고급 R&D인력 양성, 21개 투자펀드 조성 등을
중점 추진했다.

민간기업의 투자와 사업추진, 정부의 적극적 지
원 등이 뒷받침된 결과 다행스럽게도 현재 일부

분야에서 시장이 빠르게 열리고 있고, 투자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도 전기차 100% 국산화, 스마트십(Smart Ship) 개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수출 6배 증가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성장동력에 진출하는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구조도 보다 입체화되고, 우리 경제의 산업적 포트폴리오도 더욱 다양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이차전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되는 등 투자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강해지고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창출 앞당길 것

그러나 지난 2년여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숨 가쁜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략을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고, 신성장동력산업이 자리 잡는데 필요한 제반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세계적으로도 일본·중국·미국 등 주요국이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선점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이라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행점검 과정과 두 차례에 걸친 민·관 합동 워크숍을 통해 시장의 개선 요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민간전문가들은 전략적 선택과 집중 필요성, 기업의 투자애로와 제도개선의 지연, 금융지원 시스템 확충,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 부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4세대 이동통신 등 조기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시장이 가시화되는 과제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IT+조선' 등 융합화 확산을 위해 부처 간 R&D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성장동력은 융합화가 핵심이고 투자애로도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데 반해 부처별 칸막이가 상존하고 범부처 차원의 일괄 개선노력이 미흡하다고



지난 4월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 모습

지적했다.

이율리 신성장동력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지원이 긴요하나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할 금융과이닝 능력이 불완전하고, 위험분담을 뒷받침할 제도여건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장과 기술환경 변화 속도와 인력수급 간 시간적 불일치가 큰 반면, 대학 교육제도 등 인력양성 시스템은 융합환경 대응에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시장의 요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과 협력이 신성장동력 성공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하에,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장의 요구가 큰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신규과제 중 3년 이내에 성과창출이 가능한 10대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해 신성장동력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해 어려움을 밀착·해결하는 업종별 전담관제를 새로 도입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과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서 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로 하여금 시장과 교류하고 협력해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를 통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관련 부처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해 정책을 시장 수요에 맞게 조율해 나갈 것이다. 내외

신성장동력을 소득 4만달러 시대 견인차로!



이동욱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장
dwlee@mke.go.kr

최 근 주요국들이 신성장동력 분야에 본격 진 입하고 있다. 미국은 나노제조·바이오·로보틱스 분야에, 독일은 해상풍력과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도 신성장동력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은 9대 신흥전략산업에 5년간 680조원의 천문학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LED·이차전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

2년 전인 지난 2009년 초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종합적인 육성 계획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세계적인 신성장동력 육성 속도전쟁에서 뒤질 경우 시장을 선점당해 고 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신성장동력은 5~10년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대표선수를 선발한 것이었으며, 녹색성장·청 년고용 등 국정어젠다의 실천적 해답으로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2009년 1월 신성장동력 비전 발표 이후 종합 추진계획(2009년 5월), 스마트 프로젝트(2009년 7월), 장비산업 육성방안(2009년 8월), 투자활성 화방안(2010년 1월), 성과추진전략(2010년 12



정부는 신성장동력 전반에 관한 종합정책으로 소프트웨어, 3D산업, 시스템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시밀러 등 개별 품목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국내 바이오시밀러 생산 기업인 셀트리온의 생산시설

월) 등 신성장동력 전반에 관한 종합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2010년에는 소프트웨어(2월), 3D산업(3월), u-헬스(5월), 이차전지(7월), 시스템반도체(9월), 전기차(9월), 신재생에너지(10월), 바이오시밀러(11월) 등 개별 품목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계획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가 1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부문의 신성장동력 투자확대에 따라 이차전지·LED·원전플랜트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바이오시밀러·태양광·로봇은 거대 세계시장을 목표로 기업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RFID·스마트선박기술·신소재·소프트웨어 등은 기존 경쟁력을 발판으로 차세대 서비스와 기술제품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2009년 추정사업으로 추진했던 '스마트 프로젝트'의 경우도 기술개발, 상용화, 투자, 고용 등에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1조9,800억원 투자로 당초 계획의 123%를 달성했고, 신규 고용도 5,733명을 창출하는 등 프로젝트 추진결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신성장동력 주요 품목에 대한 산업발전단계 분석에 따르면 LED응용, 시스템반도체, 태양전지, 콘텐츠, 지능형 그린자동차부품 등 5개 품목은 조기에 성과도출이 가능하고, 바이오의약품, 차세대무선통신, 차세대디스플레이 등 3개 품목은 2020년까지 기술력과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상기 8개 전략품목의 본격 육성과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산업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산업생태계의 공통 인프라인 금융지원시스템, 지식재산권, 표준, 인증, 세계 등을 개선해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됐다.

원천기술 R&D 확대해 혁신기술 도입 가속화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을 통해 신성장동력이 202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역량을 결집해 나

〈표〉 17개 신성장동력(2009년 발표)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첨단융합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식품
고부가서비스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MICE·관광



혁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원천기술에 대한 R&D를 확대하고, 공공수요를 활용해 초기시장을 창출하며, 바이오특성화대학원,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등을 통해 R&D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상용화 R&BD도 확대할 것이다.



갈 계획이다. 먼저, 혁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원천기술에 대한 R&D를 확대해 나가고, 공공수요를 활용해 초기시장을 창출하며, 바이오특성화대학원,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등을 통해 R&D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가려고 한다.

또한 산업화 초기에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상용화 R&BD를 확대하고, 글로벌기업과 국내 부품소재기업 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 LED 융합인력, 원자력발전 전문인력 등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융합신제품 임시인증제'를 도입하고 '산업융합 옴부즈맨'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동차·조선·철강·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이 성장주기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은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희망동력이다. 신성장동력 분야의 창의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해 동북아 신 경쟁 구도와 저성장·고실업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경제

신성장동력 금융 강화로 실물부문 육성 뒷받침



홍두선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hds114@mosf.go.kr

정부는 2009년 1월 3개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을 선정한 이후 이들 분야에 대해 R&D 지원, 인력양성과 함께 필요한 금융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추진해 왔다. 신성장동력에 기존산업과 차별되는 금융대책을 마련했던 이유는 이 분야의 특수성 때문이다. 기술이 핵심요소인 신성장동력은 새로 개척되는 분야로, 성숙된 산업과 달리 높은 투자위험을 수반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기존의 담보나 보증 위주의 금융방식으론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투자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고 장기적 성격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프레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맞춤형 프레임워크’ 통해 체계적 금융지원 강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동안 정부는 신성장동력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레임워크’라는 금융지원 방식을 설계하고 전반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과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했다. 즉 기업 초기 R&D 단계에선 정책금융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민간금융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도록 했으며, 전 단계에 걸쳐 금융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금융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신성장동력 금융강화 대책은 그간의 지원성과를 짚어보고 신성장동력 금융 강화를



상장을 통한 자금 회수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3월 신성장동력 코스닥 상장특례를 도입했으며, 후속조치로 코스닥에 신성장기업부를 신설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통해 실물 부문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도한 기존의 프레임워크하에서 미진한 분야를 보완함으로써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우선 R&D·사업화 단계에선 정책자금 투자를 촉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09년 1월 신성장동력 선정 이후 마련된 신성장동력펀드 등 각종 정책펀드의 투자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성된 정책펀드는 총 4조6천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아직 투자대상 발굴단계에 머물러 있고, 상업적 베이스에 기초해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집행률이 12~29%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선 각종 정책펀드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펀드자금을 운용하는 신규자산운용사 선정 시 투자집행 실적에 우수한

자산운용사를 우대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기술평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업정보나 기술정보 등을 자산운용사에 제공해 투자대상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에 한정됐던 정책펀드 투자대상을 의료·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한다. R&D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결성된 펀드의 투자대상을 콘텐츠·SW 등 유망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글로벌 콘텐츠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자본력과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성장·성숙단계에선 자본시장 중심의 민간금융을 활성화한다. 특히 다양한 자금조달 기회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 중심으로 민간금융을 활성화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신성장 분야가 장기·고위험 특성을 가지고 있어 2~3년 단위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야기하는 은행 대출이 신성장동력 분야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중으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3천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 등이 신용보장을 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도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탈과 개인투자자들의 애로요인 중 하나였던 투자자금 회수장치도 다양화했다. 우선 상장을 통한 자금회수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3월 신성장동력 코스닥 상장특례를 도입했으며, 후속조치로 코스닥에 신성장기업부를 신설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상장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0~4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상장 이외의 회수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M&A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부족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

“

R&D·사업화 단계의 정책자금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자산운용사 선정 시 투자집행 실적이 우수한 자산운용사를 우대하고, 정책펀드 투자대상을 의료·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성장·성숙 단계에선 3천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 발행 등 자본시장 중심의 민간금융을 활성화할 것이다.

”

한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며, 해산하는 벤처캐피탈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전문으로 매입하는 펀드도 조성한다.

보증·담보 위주가 아닌 기술 중심으로 대출

이번 대책에서 특히 역점을 둔 분야 중 하나는 기술 중심의 금융인프라 확충이다. 우선 기존의 보증·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신용대출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이 여신을 제공할 때 기업의 기술력을 충분히 고려하는지를 은행 경영실태 평가 시 평가하고,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자금 배분이나 온렌딩(On-lending, 정부가 직접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은행 등에 위탁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 대출 자금 배분 시에도 고려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평가모형을 발전시키는 한편 산업·기술의 융합화 추세에 맞춰 새로운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그 예로 녹색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산업과 같이 새로운 분야나 최근 강조되는 분야에 대한 기술평가 모형을 개발 중이다.

신성장동력 중 녹색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녹색인증제도는 금융권에 투자대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4월 시행됐는데 그간의 기술발전과 환경변화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마련된 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인증대상 기술을 기존 1,263개에서 1,745개로 늘리고 인증사업도 기업의 녹색생산시설 증설과 친환경적 공정개선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신속한 인증을 위해 금융권 여신심사와 중복 문제가 제기됐던 시장성 기준을 삭제해 기술성·녹색성으로 심사기준을 단순화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들의 어려움 중 하나였던 자금조달 애로가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나아가 이번에 금융강화 대책뿐 아니라 실물부문 육성 대책도 함께 발표됐기 때문에 실물·금융 대책 간 시너지 효과로 궁극적으로 신성장동력 분야 실물과 금융 간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강화 대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신성장동력 발전에 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나리경제

신성장동력 끌어갈 '사람' 키우는 데 주력



성기억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장
kasung@mest.go.kr

우 리나라가 신성장동력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선 과학기술력과 이를 뒷받침할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09년 5월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2018년까지 10년간 70만명의 신성장동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약 17만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부처별로 보면 교과부가 중장기적 차원에서 R&D 확대 등을 통해 11만명을 양성했으며, 지경부 등 관계 부처는 단기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6만명을 양성했다. 전반적으로 양적으론 당초 계획에 따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지난 2년간 양적인 측면에선 성과를 거뒀으나, 급변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요에 빠르게 반응하는 유연한 교육체제로의

전환 등 질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2년 전 신성장동력 추진전략 수립 당시만 해도 원전수출 등으로 원자력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현재와 같이 커질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한 빠른 기술발전에 의해 인력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과 1년 반 사이에 스마트폰 사용자가 1천만명으로 급증했으나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개발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기술 분야별로도 현재 LED(2012년까지 5천명), 시스템반도체(매년 2천명) 등 분야에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학과 개편,



경북 구미대학교은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3~15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연계한 산학연계 혁신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사진은 프리잡 행사에 참석한 신입생들의 모습

“

정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수요와 밀착된 인력 공급을 위해 대학의 구조 개편을 유도하며, 신성장동력 분야별·수준별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정원 조정 등 수요에 대응하는 자발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수요와 밀착된 인력 공급을 위해 대학의 구조 개편을 유도하며, 신성장동력 분야별·수준별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산업체와 대학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성장동력 분야별로 대학과 산업체 협의체 간 연계를 통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공급방안을 모색하는 상시 플랫폼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체 협의체는 산업계 수요를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은 이를 반영해 학과 개편, 교육과정 개선 등을 추진해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며, 정부는 특정 분야에 예상치 못한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CU) 등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신성장동력 현장 수요와 밀착된 인력 공급을 위해 대학의 구조 개편 및 제도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정원 외 설치가 가능한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교육제도의 활용을 권장할 것이다. 국립대학 통·폐합 시에는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특성화를 유도하며, 사립대학에는 학과개편 컨설팅을 지원해 대학의 체질 개선도 촉진한다. 아울러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분야 산학협동연구, 산업체 애로기술 지원 등 산학협력 실적으로 교수가 평가받고 승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기업의 퇴직 임직원을 채용하는 '산학협력중점교

수'도 2010년 64명에서 2011년 220명기량으로 확대할 것이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와 대학 간 연계 등 산학협력 위주의 활동을 하고 산학협력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외에도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 및 석·박사과정 등 현장중심 학제를 도입하고, 전략산업과 연계된 학과를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산업단지 캠퍼스'를 조성해 대학과 기업의 공간적 융합을 통해 현장밀착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분야별·수준별 인력양성 체계적으로 지원

마지막으로 '고급연구인력-지역기술인력-현장실무인력'의 신성장동력 분야별·수준별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고급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해 R&D사업을 확대해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그룹을 육성하고 융합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추진 시 신성장동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4대 과기대학(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을 신성장동력 분야로 특성화해 세계적인 고급두뇌자원(Brainware)의 핵심기지로 육성할 것이다.

지역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선 산학협력선도대학을 지역의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학과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연계형 교육트랙 개선을 확대한다. 취업연계형 교육트랙은 산업체 임직원과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산업체 임직원을 교수로 초빙하며,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현장실무인력 양성을 위해선 신성장동력 분야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대학 및 폴리텍 대학을 육성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것이다. 나아가 지난 4월에 확정된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년)과 연계, 초·중등 과학예술 융합(STEAM) 교육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새로운 신성장동력 분야를 창출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나라경제

“전기차, 성장동력 삼으려면 정부부터 멀리 보아야”

김규홍 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관리실장

가솔린자동차를 대신할 미래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전기차는 17대 신성장동력 분야 중 하나로 소형차 ‘Blue-On’ 개발, 핵심부품 100% 국산화 등 지난 2년간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뒀다. 김규홍 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관리실장을 만나 전기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기존 자동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엔진을 사용한다. 이런 차들은 가솔린과 가스로 구동한다. 전기차는 기존 엔진의 역할을 모터가 하는 차다. 따라서 연료는 전기가 된다. 하이브리드차는 기존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중간 정도로 보면 된다. 전기차가 모터로만 움직이는 데 반해 하이브리드차는 모터와 엔진을 모두 가지고 있다. 원래 하이브리드차는 연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차다. 연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정속주행처럼 엔진이 최적조건에서 주행을 하는 거다. 그런데 시내처럼 밀리는 구간에선 정속주행을 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모터가 어시스트를 한다. 하이브리드차는 모터가 보조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터로만 주행하면 4~5km밖에 못가는데, 이를 좀 더 늘린 것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다. 전기를 많이 쓰는 데 반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전을 해야 한다. 외부에서 전력을 충전한다는 점에서 전기차로 보기도 한다. 하나 더 설명하자면 연료전지차가 있다. 연료전지차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와 달리 내부에서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직접 만들고 그 전기로 모터를 돌린다.



수소연료전지차라고도 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이뤄지는 차종은 무엇인가?

전기차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은 디젤 자동차 기술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들어 전기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사마다 신차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도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전기차 개발 및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를 가장 먼저 양산한 일본은 전기차에서도 역시 가장 앞서 있다. 그러나 실용화 측면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전기차가 주요 시장으로 발전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와 일충전거리(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해 일충전거리를 충분히 늘리고, 배터리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다면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현재 배터리 부분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점이다.

전기차가 상용화되려면 전기충전소 등 새로 갖춰야 할 인프라가 많을 것 같다. 더구나 가격도 비싸 경제성도 떨어

지는 것 같은데...

자동차시장 전망을 보면 2020년이 되도 전기차 비중은 5% 정도다. 주된 시장으로 성장하기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다. 하지만 전기차는 기존 차에 비해 에너지비용이 1/4밖에 들지 않는다. 차량 가격만 낮춘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또한 한 번 충전으로 160~180km를 가는데, 사람들의 소비성향을 보면 1일 평균주행거리가 보통 60km 내외다. 따라서 도시 내에서 세컨드카로 적합하다. 일본은 지역별로 전기차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실증사업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정부가 지정한다.

유해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나?

물론이다. 전기차의 좋은 점을 사람에게 좋은 것과 지구에 좋은 것으로 나눠 말하자면, 유해물질은 사람과 관련 있는 거다. 보통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CO(일산화탄소), HC(Hydrocarbon), NOx(질소산화물)를 말하는데, 전기차에선 이런 유해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또 현재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CO₂의 경우도 전기차에선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기존 자동차도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나?

개조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가솔린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과 가솔린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LPG차량처럼 연료를 대체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량의 플랫폼(차체)이 중요하다. 전기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가 시급하다. 현재의 전기차는 기존 자동차 차체에 내부만 전기차 부품을 채운 거다. 무거운 차체에 힘은 약하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업체들은 전기차용 전용 차체를 사용한 양산차량을 2014년 정도에 생산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차의 원조격인 도요타의 프리우스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막대한 누적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업체들이 앞다퉈 전기차, 곧 그린카 개발에 나서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린카는 개발비용이 엄청나다. 지금도 기존 자동차에 비해 고가지만, 개발비용을 다 반영한 것은 아니다. 들어간

비용보다 싸게 팔아야 하기에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왜 기업들은 그린카를 만들까? 도요타는 프리우스를 만들어 판 이래 적자를 보기도 했지만, 그리는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있다. ‘도요타’ 하면 친환경 자동차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이 갖게 됐고, 더불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알려졌다. 그것이 기존의 도요타 차량을 잘 팔리게 했다. 이런 점을 알기에 업체들로선 그린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거다. 또 다른 이유는 신성장동력처럼 미래산업을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돕는 과정에서, 자연히 업체와의 접촉이 빈번할 것 같다. 업체들이 털어 놓는 애로점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고급인력과 연구 및 시험시설 부족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다 보니 고급인력들은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은 연구시설을 갖추기도 쉽지 않다. 또 기술개발이나 정보 등에도 굉장히 취약하다. 우리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핵심기술 이전, 부품 독자 설계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지원과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기차는 우리 산업을 이끌 미래 핵심산업 중 하나다. 정부도 적극적인 육성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제언할 점이 있다면?

1992년에 차세대자동차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전기차 연구를 범부처적으로 수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배터리 기술이 예상만큼 발전하지 못하자 중단됐다. 그때 지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면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국으로 성장했을 거다. 정부는 현재 전기차를 비롯한 그린카에 대해 다방면으로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생명력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만이 큰 그림 하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체가 포기하는 기술 분야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남의 경제

신성장동력 선점 놓고 지구촌 '불꽃 경쟁'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장
juwon@hri.co.k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래 자국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동력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세계경제를 지탱하던 IT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동력이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세계가 안정과 번영을 경험했던 시기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특정산업이 부상되고 이것이 경제 전체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쳤다는 점이다. 19세기의 증기와 방직기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시대와 20세기의 전기와 석유에 기반을 둔 '2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랬다. 가깝게는 20세기 말 '정보 혁명'의 시대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동력 확보 못하면 경제위기' 공감대 확산

문제는 각각의 시대 사이에 기존 주력 산업들의 발전이 정체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혁신 부문이 나타나지 않는 '성장동력 공백'의 시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금융위기까지의 기간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돌이켜 보면 '닷컴 기업'의 몰락으로 대변되는 IT산업의 붕괴가 2008년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과도한 잉여생산 능력이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급격한 경기 침체가 발생해 실업 문제가 이슈가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해 4월 21일 백악관에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건물 에너지 효율 합리화를 위해 경기부양 자금 4억5,2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됐다. 이는 어느 정부에게나 큰 정치적 부담이 된다. 그래서 단기적 경기 부양에 목을 매게 되고 저금리 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풀게 된다. 그러나 확대된 유동성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기업투자 부문이 아닌 금융 및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 버블을 만들었고 금융위기는 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2000년 경기 침체에 대응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변명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결과는 참담했고 이러한 정책적 실수는 선진국들에게 뼈아픈 교훈이 됐다. 미 백악관의 '국가혁신 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Driving

Towards Sustainable Growth and Quality Jobs, 2009)은 이와 같은 반성과 소회를 잘 보여 준다. 경제는 허상의 금융 시장에 의존해선 안 되며 단기적 경기부양정책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에 미국은 ‘국가혁신전략’과 ‘경기부양법’(Recovery Act, 2009)을 통해 근본적으로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저탄소 경제다. 구체적으로 IT, 융합, 신재생·청정에너지, 바이오산업 등의 육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바이오산업이다(필자 주; 바이오산업은 Green(농업), Red(의약), White(산업) 바이오로 분류됨. 농업바이오 분야는 사용 용도에 따라 식용과 비식용(에너지 crop 등)으로 나누기도 하며, 산업바이오는 바이오연료와 바이오화학으로 구분될 수 있음). 석유화학산업이 화석연료인 석유에 기반을 둔 산업이라면, 바이오산업은 농산물 등과 같은 유기물 원료를 가지고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석유화학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다. 미국 정부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 문제의 대두에 따른 새로운 대안으로 이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2000년대 저성장 시대를 경험했고, 그 결과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주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간 나오토 정권은 2020년까지 실질 경제성장률 2%를 목표로 하는 ‘7대 전략 분야’와 ‘21개 프로젝트’의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7대 전략 분야’는 환경·에너지, 의료·건강 서비스, 아시아 경제, 관광·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 고용·인재, 금융 등이다.

이 중에서 신성장산업과 관련이 깊은 분야는 역시 환경·에너지 산업이다. 차세대에너지, 폐기물처리·재활용, 차세대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등이 해당된다. 한편 의료·건강 분야 중에선 바이오제약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의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은 ‘저탄소경제발전전략’(2009)과 ‘7대 신흥산업 육성 정책’(2010)(필자 주; 공식 명칭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무원의 결정’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저탄소경제발전전략’은 2020년까지 GDP 한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40~4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

미국은 ‘국가혁신전략’과 ‘경기부양법’을 통해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까지 실질 경제성장률 2%를 목표로 하는 ‘7대 전략 분야’와 ‘21개 프로젝트’의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저탄소경제발전전략’과 ‘7대 신흥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에 나섰다.”

”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에너지 과소비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자 기존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별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략은 이미 2007년에도 마련된 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력, 태양광 발전, 핵발전 등이다.

에너지 분야를 떠나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신성장동력은 2010년 9월에 발표한 ‘7대 신흥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정책의 대표적 산업기술로는 신에너지, 환경친화적 기술, 전기자동차, 신소재, 바이오기술, IT 등을 들 수 있다.

각국 관심 분야 유사…‘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해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배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이 관심을 나타내는 신성장동력 분야들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신성장산업의 키워드는 IT 기반, 융합, 환경·에너지, 바이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도 주요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곧 가까운 미래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그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성장 엔진을 확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전에도 그랬듯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열거된 산업이나 기술들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는 점이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장밋빛 전망에 현혹돼선 안 된다. 기업과 국가 경제의 운명을 결정짓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높은 식견과 혜안이 절실하다. 나미경제

건강하고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장석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센터 소장
sichang@kiet.re.k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 성장을 위한 우리 경제의 전략 재구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산업환경이 위기 이전과는 매우 다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그간의 국가 간, 개별기업 간 또는 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소위 '산업생태계' (business ecosystem) 간의 경쟁심화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기술과 품질 면에서 주도권을 가진 기업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사용자와 수요기업의 니즈(needs), 가치, 감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창의적 기업이 없다면 더 이상 생존과 경쟁이 어려운 시대다. 해당 산업뿐 아니라 부가가치 사슬상 관계된 여러 분야의 보완적 기업과 경쟁기업, 경쟁력 있는 부품·소재·장비기업, 각종 기능별 보완적 기업과 협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생태계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가가 미래산업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에 기초한 장밋빛 미래 모습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또 지금까지의 특정기술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관련 소재부품에서부터 보완재, 인프라·규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산업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금융위기 이후 산업생태계 간 경쟁 심화돼

그런 만큼 일부 성과를 보이는 신성장동력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조성 차원의 전략과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다.

첫째, 위기 이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의 성과가 LED 응용 분야, 전기차, 차세대TV 등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부족하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을 해소하는 근본적 방법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시장, 특히 금융기관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최근 논의되는 신성장동력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에 기초한 장밋빛 미래 모습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우리 기업 여건과 장점에 비춰 비즈니스가 가능한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의 경우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관련 유망 부품과 소재, 보완적 제품과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만한 SW·콘텐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기술과 해당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뒷받

침할 수 있는 인프라는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 경제의 미래 희망으로도 불리는 신성장동력은 대부분 특정 부품·장비·시스템으로 승부가 가려지기보다는 단말기·시스템·서비스 간 연계 또는 부품소재·장비·시스템·서비스 간 효과적인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비록 개별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곧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기 쉬운 품목과 서비스들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품목의 경우 관련 부품과 소재, SW와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우수한 기술력과 공급능력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국공립 및 민간 연구기관과 협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용자와 수요기업, 공급기업과 해외소재 기업의 니즈와 가치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신성장동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선 지금까지의 특정기술 개발 중심의 산업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관련 소재부품에서부터 보완재, 관련 인프라와 규제, 법제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산업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 예로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장착할 전기차가 개발되지 않거나 배터리를 저렴하게 제공할 충전소나 리스산업이 발달되지 않으면 전기차의 대량보급과 시장창출은 생각하기 어렵다.

과거와 같은 특정산업 지원·보호는 곤란

마지막으로,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나 금융지원 시 뒤따르는 리스크를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신산업에 대해 현행 녹색인증제와 같은 신산업인증제를 도입해 공신력을 부여하고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해야 신산업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이 과연 금융과 신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는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신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분야별 발전전략과 정책을 발표하지만, 그것은 과거 산업정책에서 사용되던, 특정산업의 지원과 보호를 염두에 둔 ‘승자



국내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기술수준은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화학은 지난 4월 충북 오창산업단지 내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준공하고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선택’(picking winner)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의 신성장동력 비전과 정책은 그 산업의 기업투자 여건을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조기에 시장을 창출한다든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진출 여건과 투자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지는 것이지, 과거와 같이 특정산업을 지원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그 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의 금융지원을 보증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정부가 제시하는 유망산업보다는 그 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 처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무엇이 유리한지를 엄격히 평가하고 판단하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다. 특히 신성장동력의 경우 관련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은 기술 및 산업여건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과거 IT기업의 경우엔 직접 경영참여나 기술자문 등을 통해 스크린했지만, 최근 바이오기업의 경우엔 의약 규제가 기업 사활에 결정적이라는 점에 착안해 기업 스크린과 모니터링에 과학자와 제약회사를 참여시키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신산업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그만큼 기술혁신 시대에 금융기법과 지원방식에도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신산업에 진출하는 기업 역시 자기 책임과 판단하에 정부가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정부 보증의 금융지원만을 바라보는 자세는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더 이상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나만 경제]

경제불황기에 나타나는 카르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카르텔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최근 OECD 글로벌경쟁포럼에서는 경제위기 시 급격한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사업자들 간 카르텔, 소위 '불황카르텔'을 형성한 경우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 반적으로 공동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동행위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카르텔'(Cartel)이라고 한다. 예컨대, 어떤 나라에서 A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이 5개 있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90% 정도 된다고 가정할 때, 이들 5개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카르텔이다. 그 결과 A제품 시장에서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돼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들은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A제품을 구입해야만 한다.

카르텔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최근 경제위기 시 급격한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사업자들 간 카르텔, 소위 '불황카르텔'(crisis cartel)을 형성한 경우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 2011년 2월 OECD 글로벌경쟁포럼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시장기능 왜곡' vs '가격상승효과 상쇄'

경제불황(economic downturn) 기간 동안 기업 간 형성되는 불황카르텔의 영향에 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다. 먼저 지배적 견해인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카르텔이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시장기능을 왜곡시키고 소득을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이전시키므로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일부 개발경제학자들은 카르텔이 가격상승효과로 인한 해악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비가 줄어드는 산업의 경우, 소수 기업에게 사회전체 수요량을 분배해 준다면 그 기업들은 생산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경제위기와 같이 수요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이러한 시장분할 카르텔의 역할이 없다면 가격은 더욱 상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불황카르텔과 관련한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대만은 전통적으로 상인들에 대한 불신이 강해서 중앙정부의 가격통제 및 자원과 생산에 대한 규제가 일반적이었고, 민간에서도 반경쟁적인 관행, 길드를 통한 가격카르텔이 만연했다. 이러한 가운데 1991년 제정된 「공정거래법」(Fair Trade Law)엔 불황카르텔에 대해 법집행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막상 불황카르텔에 대한 면제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사업자들의 신청 자체도 거의 없었고, 대만 공정위도 1998년 섬유생



지난해 1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업체들이 산업합리화와 불황 극복 차원에서 향후 2년간 공동으로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연구개발에 나서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레미콘 업계의 카르텔 인가신청에 대해 일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산지들의 물량제한협정(capacity-reduction agreement) 신청에 대해 시장이 곧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1974~1987년 사이에 규소철(ferrosilicon) 가격이 약 40%가량 하락했고 가격하락이 이어지자 사업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한 적이 있다. 이 카르텔의 흥미로운 점은 참가 사업자들이 규소철 수입업자를 「반덤핑법」 위반 혐의로 무역위원회에 제소했던 것인데, 이전의 카르텔들이 단순히 국내시장 분할합의를 했던 것과 다른 점이라고 할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당초 이들 사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카르텔에 의한 행위임이 밝혀지자 결정을 번복했다.

최근 경제위기에서도 불황카르텔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2008년 세계 무역량의 급격한 감소와 이에 따른 조선업계의 매출감소에 따라 유럽 조선업자들이 소위 'Baltic

Max Feeder scheme' [필자 주; 배들의 수송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차터료(대여료)를 인상하고 선주들의 수입을 증가시킴을 시도했는데, 2010년 1월 유럽 집행위(European Commission)가 이의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려 하자 기업들이 이를 자진 철회했다.

이 밖에도 고무시장에서 국가 주도로 나타난 불황카르텔로서,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가격하락에 접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정부가 2009년 고무수출을 91만5천톤 감소시킨 사례를 들 수 있다. 전 세계 고무수출 시장에서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 국가의 수출량 제한은 고무가격의 상승을 목표로 했으나 원하는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황을 이유로 공동행위(카르텔)가 인가되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초

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해야 한다. 둘째,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보다 낮고 셋째,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넷째, 앞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기업의 합리화에 의해 이 사항들을 극복할 수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정밀하게 심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불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업자들은 넓게 보려고 할 것이고, 이를 심사하는 경쟁당국은 가능한 좁게 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09년 불황에 처한 레미콘 업계가 공동행위의 인가를 공정위에 신청한 적이 있는데, 공정위는 원재료의 공동구매나 물량 배분은 허용하지 않고, 공동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공동행위를 일부 허용했다. 기본적으로 단순한 경영부실이나 일시적인 경기악화만으로는 경성카르텔에 해당하는 물량배분 등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긴급구조조치 정책 검토할 만

글로벌경쟁포럼에 모인 각국의 경쟁당국은 대체적으로 불황카르텔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비록 최근의 경제위기는 2차대전 이후 가장 최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카르텔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으며, 최근 위기 시 레미콘업계에서 산업 구조조정 명목으로 카르텔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에서 정한 관련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승인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EU 집행위는 EU법에 따라 경쟁제한적인 산업 구조조정 협정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 카르텔 협정이 상품의 생산 또는 분배를 증진시키거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진보에 기여해야 하고 둘째, 소비자에게 적절한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야 하며 셋째, 해당 협정상 이뤄지는 제한은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고 피력했다.

영국 또한 산업 구조조정 협정에 대해서는 경쟁법이 면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친경쟁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이상 경쟁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01년 북아일랜드 지방의 구제역 발생 시 가축 사육업자 간의 가격카르텔 행위에 대해 위법성은 인정하면서 과징금을 면제해준 사례를 언급했다.

최근 경제위기 시에 각국은 불황카르텔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생산자 등에게 보조금(subsidy)을 지급하거나 긴급구조조치(bailout)를 실시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경쟁을 왜곡할 여지는 있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경제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단지 불황카르텔만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경제불황기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택하게 되면 불황카르텔을 인정하는 경우와는 매우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불황카르텔 결과가격은 상승하지만 보조금 정책의 결과가격은 하락하게 돼 소비자후생이 늘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도 즉각 나타날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사업자들로부터 하여금 불황카르텔에 나서게 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일시적으로 최저가격을 지정해주는 방식을 취한다면 경쟁과정과 소비자이익에 미치는 해가 더 약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황카르텔의 허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매우 엄격하고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르텔이 가격을 상승시켰을 때 구매자에게 미치는 해악뿐만 아니라 불황카르텔의 이점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세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나라경제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주OECD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수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ysyeef1@daum.net

중국경제 내실 다질 ‘12차 5개년 계획’

국가의 현명한 ‘계획’은 변화와 불안정한 시기를 무난히 넘기고 충분한 효과를 내게 하는 기간이 된다. 중국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이하 ‘12.5계획’)은 조화와 상생을 고려한 포용성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내수확대를 위한 다양한 개혁과 변화를 꾀하고 있다.

역사라는 장구한 여정 속에 진화를 거듭하는 곳이 있다. 바로 중국이다. 개혁개방 30여년 만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이번에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은 외관 키우기보다 내실 다지기에 충실하려고 한다.

중국정부는 외형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욕심을 다소 접어 두고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일부 계층이 아닌 대중 다수의 부유를 위해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제, 사회 운용의 틀을 들고 올해부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한다.

‘국가의 부강’에서 ‘국민의 부유’로 성장의 틀 전환

‘12.5계획’이 예전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성장 제일주의가 아닌 주변과의 조화와 상생을 고려한 포용성



중국 시민들이 지난 5월 7일 베이징의 차이스커우 백화점에서 귀금속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성장을 기치로 내건 것이다. 사회전체의 상생을 고려한 정책기조를 내건 것이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전보다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려 한다. 이 포용성 성장과 관련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서민주택 건설이다. 지난해 580만 채, 올해 1천만 채 등 부동산 버블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을 해소하고자 중국



지난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7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12.5규획' 과 올해 업무보고를 공식 발표했다.(왼쪽) 지난 3월 중국 장쑤성 난징시 난징항구 컨테이너 터미널의 전경(오른쪽)

정부는 올해 1조3천억위안을 투자해 서민주택 건설에 나섰다. 이는 2011년 중국 부동산 전체 투자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앞으로 서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건설장비, 건자재 수요도 적지 않게 발생할 전망이다.

포용성 성장과 관련해 중국정부는 의료제도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높은 의료비용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칸빙난' (看病難)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의료 자원의 80%가 도시에 집중돼 있고,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5.9명으로 의료자원의 편중과 부족이 극심하다. 이를 개선하고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8,500억위안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정보화도 추진하고 있다. 농촌 주민들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해도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정부는 원격의료 진료를 적극 보급하고 의료정보 전산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과거 중국의 의료정보화는 수납시스템 정보화를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제 환자의 건강정보 전산화에 중점이 있다. 의료제도 개혁으로 병원용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이 제고되면서 가정에서도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그간 진입 장벽이 높았던 외국자본의 의료 분야 진출장벽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자본의 지분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자격을 갖춘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독자의료기관 설립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는 규정이 지난해 말 발표됐다.

내수확대에 사활 걸다

이번 '12.5규획'에서 중국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내수확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경제를 이끄는 삼두마차(투자, 수출, 소비) 중 하나인 '수출'이 치명타를 입자 중국은 외부 환경변화에 좌지우지되는 자국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수출'에서 '내수'로 수요창출의 방향전환을 선언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감행하며 경제성장을 끌고 가는 것도 이제는 무리라는 점이 중국이 내수를 키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12.5규획'에서 내세운 내수확대는 여러 가지로 눈에 띈다. '내수'라는 주제를 별도 항목으로 다뤘을 뿐만 아니라 첫머리에 내세운 것도 '12.5규획'이 처음이다. 내수창출의 전제조건이 되는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정부는

가계소득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중국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9년 기준 39%에서 50%까지 높이려고 하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들어 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생산의지를 악화시킨다. 생산 활동의 건전한 성장과 가계소득 향상이라는 병존하기 어려운 두 숙제를 풀기 위한 중국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내수확대를 위해 중국정부가 '12.5규획' 기간 중 신중하게 시도하는 것이 바로 '호구제' 개혁이다. 묶여 있는 호구제 때문에 지방출신자들은 대도시 취업과 교육, 부동산 구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대도시로 인구가 과잉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를 두고 중국 내부에서 현대판 신분제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이제 중국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호구제를 조심스럽게 풀어줄 생각이다. 인구포화를 보이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농민호구를 흡수시켜 중소도시의 구매력을 높이려 한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내수확대라는 절체절명의 과업완성을 위해 호구제 개혁 카드를 꺼낼 만큼 중국에게는 내수확대가 매우 절실하다.

또한 높아진 소비력을 해소하는 공간으로 중국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지목했다. 2015년까지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높이기로 하고 내수 서비스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대만, 홍콩, 마카오자본의 중국 내 독자의료기관 설립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외자합자 여행사에 대해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업무를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외국계 독자 의료기관 설립, 외자독자 여행사의 해외여행업 종사, 외자독자 교육설립 등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이는 외국자본의 서비스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12.5규획' 기간 중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은 의료 분야다. 한류 열풍의 붐으로 한국 성형의료 서비스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관심이 높고 성형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비즈니스가 성행이다. 상하이, 베이징 등 연안 대도시뿐만 아니라 쓰촨 성, 충칭 등 서부지역과 후난 성, 허

난 성 등 중부내륙에도 한국의 성형미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

미래 10년을 끌고 갈 신성장동력산업

올해부터 2020년까지 중국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산업으로는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의약, 첨단장비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7개 산업이 선정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신성장동력산업이 중국 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3%에 불과했으나 '12.5규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는 8%로 높이고 2020년엔 15%까지 올릴 예정이다. 신성장동력산업은 '다음번 4조 위안 프로젝트'로 불릴 만큼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예상되는 분야다. 신성장동력산업을 위주로 한 산업고도화로 제품과 기술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분야에 총 3조1천억위안을 투자하고 바이오 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100억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정책의지에 따라 각 지방정부도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점 추진 분야에 포함시키는 등 대대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집중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것이 지방정부별 중복투자를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집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계획경제 성격이 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에 많이 단련돼 있어 '계획'이 시장 내에서 신속한 효과를 발휘하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국가의 현명한 계획은 변화와 불안정한 시기를 무난히 넘기고 충분한 효과를 내게 하는 근간이 된다. 경제, 사회 운용의 큰 틀을 새롭게 바꾼 중국 정부의 판단과 계획이 이번에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 관련 필자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외교통상부 및 KD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명신
KOTRA 상하이 KBC 차장
claire@kotra.or.kr

'나라 밖 경제'는 해외 주요 경제저널의 유익하고 흥미있는 기사를 소개하는 난입니다.

아프리카 新중산층의 부상

'A new class of consumers emerges', Wall Street Journal, May 3rd, 2011



삼성전자 풀HD 3D LED TV를 3DTV 전용 안경을 쓰고 직접 시연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시민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인도에 필적하는 규모의 신중산층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이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아프리카가 세계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DB)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프리카 중산층(하루 2~20달러를 지출하는 소비층) 규모는 3억1,300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했다. 또한 이 중 하루에 4~20달러를 지출하는 아프리카인들은 약 21%로 이들은 새로운 중산층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ADB의 므슬리 엔쿠베(Mithuli Ncube)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수년간 다국적 가전·통신·유통 업체들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빈곤하지만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찾아 아프리카에 뛰어들었으며, 이러한 소비층이 창출하는 수요를 기반으로 아프리카가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빈곤은 아직까지 아프리카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ADB에 따르면 아프리카 10억 인구 가운데 약 61%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21%는 겨우 하루 2~4달러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고 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

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지만 인구증가율이 높아 빈곤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중산층이 부상하면서 이들의 소비수요가 전통적으로 농산물·에너지·광물의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해온 아프리카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해주는 강력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아프리카 신중산층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프리카 경제에 미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MF는 사하라 이남지역 아프리카 47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엔 각각 5.5%와 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도널드 김스(Donald H. Gips)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는 아프리카가 이제 거의 중국만큼 도시화됐으며,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위험은 따르겠지만 상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험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일련의 선거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아프리카 중산층들이 초기에 일궈낸 경제성과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요하네스 주트(Johannes Zutt) 케냐 지국장은 “이러한 폭력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행정체제를 개선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의 번영은 올바른 국정관리 체계 수립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남아공은 정치체제가 안정되면 경기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인 국가다. 1994년 백인 소수집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다민족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래 흑인 중산층이 꾸준히 부상해왔기 때문이다. 남아공은 여전히 인종 간 갈등, 높은 실업률, 공공서비스 부실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소비계층이 남아공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남경원**

정리 안기련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코스피지수 연초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코스피지수가 올 들어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신들은 한국 증시의 강력한 상승세에 주목했다. 이들은 낮은 밸류에이션, 일본 대지진에 따른 반사이익, 미국 경기회복세 등을 코스피지수 호조세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한편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Financial Times(이하 'FT')는 5월 17일자 기사에서 올 들어 한국 상장지수펀드(ETF)로 투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현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FT는 다른 아·태 지역 국가의 ETF가 자금 유입 둔화나 자금 순유출 현상을 보이는 데 반해 한국 ETF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를 한국 전체 펀드의 호조세와 연결시켜 분석했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이하 'IHT')과 로이터통신은 4월 21일자 보도에서 일본 대지진 여파와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한국 증시에서 투자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기대와 미국의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수출 전망 개선이 증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 신문도 4월 25일자 보도에서 코스피지수 강세에 주목하면서 펀더멘털보다 저평가된 주가를 근거로 향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일각의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대체로 한국 증시의 강력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FT와 IHT는 수출 주도의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고유가 등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FT는 한국 증시 펀더멘털이 강력한 증시 상승세가 이어졌던 과거 3년여 기간만큼 견실하지는 않다는 한 스트래티지스트의 분석을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3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주식 및 환율 그래프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보다 2.64%내린 2,055.71로 장을 마쳤으며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5.10원 오른 1,097.90원에 거래를 마쳤다.

IHT는 한국 증시의 대외 리스크로 일본 생산망 조기 회복에 따른 반사이익의 실종 가능성, 6월 미 연준(Fed)의 양적 완화 종료로 인한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 가능성 등을 꼽았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절상 및 금리인상 기조로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고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등 국내경제 전망 역시 그다지 밝지 않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 증시 특유의 리스크 요인인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전했다. *닛케이*는 특히 정유사들이 정부 압력으로 기름값을 인하함에 따라 정유사 주가가 급락한 것에 주목하면서 주주들을 무시하는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닐럼 경제

정리 강지은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김종만
국제금융센터 수석연구위원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지출 축소와 증세 합의, 2013년에야 가능할 것”

이제민: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이하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다. 2013년까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재 AAA인 신용등급 지위를 잃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등급 전망 하향이 갖는 의미와 배경은 무엇인가?

김종만: 미국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2007년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경기침체가 맞물려 정부의 총부채가 2010년 말 현재 13조4,190억달러로 GDP의 91.6%에 달한다. 총부채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전체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점차 증가해 2015년 말에

는 19조6,830억달러로 GDP의 109.4%에 이를 전망이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다. 그나마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와 발권력이 있으니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다. 그러다 지난 4월 18일 S&P로부터 2013년까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그 어떤 신용평가회사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이제민: 미국의 재정적자가 많긴 하지만 선진국 중에서 국가부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국가기관끼리 진 부채를 제외한 순부채가 GDP의 70% 정도니 당장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과거 영국의 경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준비했으나 미국은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한 것인데 S&P가 뒷북을 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미국도 재정적자 감축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때_ 2011년 5월 18일 오후 2시
 곳_ KDI 세미나실
 진행자_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참석자_ 김종만 국제금융센터 수석연구위원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준비는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S&P의 신용등급 전망 발표 후 미국 금리와 주가가 잠깐 요동쳤으나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김종만: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 포퓰리즘(populism)이다. 미국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책임 아니겠나. 부유층 지지기반을 갖는 공화당은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줄이려 하고, 중산층 이하가 지지기반인 민주당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자는 쪽이다. 민주당은 '큰 정부'를 주장하며 지출을 많이 하고,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세금을 감면하려 한다. 양당 모두 재정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 2007년까지 왔고, 리먼 브러더스, 구제금융, 재정지출 확대를 거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다. 현재는 정부 부채비율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영국보다도 좋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개선될 조짐이 없어 보이니 S&P가 우리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윤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많이 늘었고, 지금과 같은 식의 재정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향후에도 계속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S&P가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향후 재정상황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바라봐야 한다. 한편,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평가등급 조정이나 전망이 후행적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등급조정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다 최근에 하향 조정을 한 것이니, 신용평가사들의 조정·전망이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의 쌍둥이 적자 때도 마찬가지였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이제민: 미국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넘어가는 것 같다. 2000년까지 균형을 유지하던 미국의 재정이 그 후 급속히 나빠졌다. 원인은 세 가지다. 부시의 감세정책, 중동전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들어간 비용이 그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이 곧 재정적자 개선방안이 아니겠나. 가령 한시적으로 시작한 부시의 감세정책이 연장돼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한시적 제도로 시작했음에도 막상 없애려 하니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군비 또한 줄여야 한다. 공식적으로는 GDP의 4%라고 하지만 다른 항목으로 분류된 것도 있어서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금융위기가 다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위기에 책임 있는 금융기관에 과세하는 방안도 있다.

김종만: 제일 큰 문제는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한다. 보험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엄청나다. 현재 고령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부담이 GDP의 4%인데 앞으로 8%, 1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같은 의료보험 관련 사항이 법으로 보장돼 있어 재정적자를 쉽게 줄일 수 없는 구조다. 의료보험을 민영화 하지는 이야기, 저소득층 의료혜택을 어느 정도선까지만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쟁은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고통과 직결된다.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윤석: 지난해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 때 나온 감세정책을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실은 2010년 말 종료해야 하는 정책이었다. 내년 말 감세 재연장



김종만 수석연구위원

“ 미국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부유층 지지기반을 갖는 공화당은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줄이려 하고, 중산층 이하가 지지기반인 민주당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쪽이다. 양당 모두 재정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여부를 논의해야 하나 2012년에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감세에 반대했으며, 정부 지출을 통한 확장적 재정지출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오바마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을 쉽게 종료시키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1~2년내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축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전 클린턴 정부가 8년을 집권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는 대외여건이 좋았다. 경제는 호황이고, 달러강세 등에 힘입어 재정적자 감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재정감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가 안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누리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민주당이 내년에 정권을 재창출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제민: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중산층이 아니라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25만달러 이하 중산층에 대해서만 감세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인 반면 공화당은 부유층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감세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부자 감세 중단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토빈세(편집자 주: 투기자본인 핫머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외환거래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만 도입해도 수천억달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거둔 돈을 도로 보수, 고속철 건설, 교육 등에 써서 성장 동력을 올릴 여지는 지금도 많다. 성장이 되면 세수도 늘어날 것이다.

김종만: 공화당은 부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려 하고, 민주당은 의료비에 치중하고 있다. 내년이 대선이고 우리나라로 말하

면 총선적인 상·하원 선거가 있다.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상원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양쪽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미국 상황에서는, 지출은 줄이고 세수는 늘려야 재정 여건이 개선될 텐데 양쪽에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한다. 내년 대선까지는 평행선이다. 2013년이나 돼야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양당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론을 박하다가도 어느 순간 합의점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이윤석: S&P는 영국의 경우에도 2009년 5월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의회의 재정긴축 논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나자 그 다음해 7월 ‘안정적’(stable)으로 다시 바꾸었다. 이번 등급 하향 조정 전망 역시 향후 2년 동안 지켜보겠다고 했다. 결국 2013년 즈음에 가서야 가시적인 미국 양당의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평가시점에 맞춰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고 그에 맞춰 ‘부정적’(negative)전망이 ‘안정적’(stable)으로 바뀔 것이다.

이제민: 현재 공화당은 군비지출 감소, 세금감면 축소, 월가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의료비용 역시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민주, 공화 양당의 상반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윤석: 빈 라덴 사망 이후 전쟁을 계속할 명분이 줄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방비 삭감에 나설 계기가 될 것 같다. 구체적으



이윤석 연구위원

“ 클린턴 정부 시절 흑자로 돌아설 때는 대외여건이 좋았다. 경제는 호황이고, 달러강세 등에 힘입어 재정적자 감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이 내년에 정권을 재창출한다 해도 그런 상황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이제민 교수

“한 나라의 재정상황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 우리도 책임성 있고 계획적인 정부 지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복지지출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만 재정규모 자체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증가 속도와 재원을 고려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

로 정부지출도 중요한데, 미국 경제가 클린턴 집권 당시 정도는 아니지만 성장률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정부부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의 자연적 감축이 고려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부채감축은 상당히 달콤한 유혹으로 어느 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재정적자를 겪는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조성되는 환경을 내심 환영할 수 있다. 성장을 통해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명목적으로나마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김종만: 2000년 이후 재정적자가 늘어났지만 미국이 2002~2003년 감세를 했던 이유는 경기부양 때문이었다. 당시엔 필요한 정책이었다. 이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감세도 경기부양이 이유였다. 그러나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이 3% 정도였는데 지금은 2.5% 내외다. 클린턴 때는 4%였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말은 세수의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적자를 줄이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만큼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제민: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증세가 불가피하다. 결국 고통분담을 동반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세금 올리는데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다. 이번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 하락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자.

김종만: 미국, 일본을 보면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게 한순간이더라.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선진국 중에서 여건이 가장 좋았다. 재정도 흑자고 정부부채도 괜찮았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 부채비율이 GDP의 200%가 넘는 수준으로 선진국 중에서 사정이 가장 좋지 않다. 미국도 부채비율이 최근 100% 가까이 왔다. 문제가 발생하면 고통분담을 통한 해결보다는 쉬운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가 나타나자 각 현마다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연주할 사람이 없었다. 관리비만 들어간 셈이다. 우리나라도 정부 부채비율

이 GDP의 30%대라고 하는데 나빠지는 것은 금방이다. 지방공항 건설 등 지금 너무 비생산적인 곳에 재정을 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경계하고, 탄산지식으로 삼아야 한다.

이윤석: 김 박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근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의 경우 예전에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과거엔 외환보유액, 경상수지에만 관심을 갖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제는 재정건전성의 악화 가능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유로·달러권 국가와는 달리 대외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의 경우 재정건전성 우려가 심화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정 부문까지 위협받아서 곤란하다. 앞으로 고령화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는 계속 늘어날 텐데 지금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제민: 재정상황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지금 미국의 재정 악화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유럽도 그리스를 제외하고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복지 때문이 아니라 금융 쪽 문제를 재정이 처리하다 그렇게 됐다. 물론 한국에서 복지에 따른 재정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지출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만 재정규모 자체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증가 속도와 재원을 고려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

김종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상당히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복지 부문에 대한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지금부터 관리하고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리경제]

소나무 · 잣나무 살리기!
국민 모두가 동참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숲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건강한 소나무 · 잣나무에 재선충병이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 이동을 막아
잎이 아래로 처지고 점차 잎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죽어갑니다.

재선충병
피해 증상



건강한 소나무



감염된 소나무



고사된 소나무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처지면서 갈색으로
죽어가는 소나무



솔수염이늘소
탈출 흔적(탈출공)이
있는 소나무



감염된 나무와 감염목 이동사실을 신고하는 국민에게 **최고2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소나무 · 잣나무를 이동할 때는 산림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588-3249**

- 42 서비스산업 선진화 다시 속도 낸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 44 2015년 디자인 경쟁력 세계 7위로 도약
디자인산업 육성 종합계획
지식경제부
- 46 FTA 활용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기획재정부
- 48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해양부
- 50 불안한 '액티브X' 대체 적극 추진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추진 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 52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다시 속도 낸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올해는 현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4년차로 지난 3년간 추진해온 과제를 점검·평가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그간의 대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과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망 서비스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멘텀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수차례 논의 끝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했고, 지난 4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발표했다.

의료·교육 등 지연과제 올해 안에 마무리

서비스산업은 2010년 기준으로 고용의 68.6%, GDP(부가가치)의 58.2%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대외의존도 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다. 중국·일본·영국 등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더욱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청년·여성·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정부는 2001년 이후 지난 10여년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일자리 창출, 의료, 관광레저, 방송통신 등 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이 전체산업 대비 68.6%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고, 해외환자 유치행위 허용(2009년 5월

「의료법」 개정, 의료관광비자 도입 등 제도개선 노력으로 2008년 2만명 수준이던 해외환자 수가 2010년 8만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가상광고·간접광고 등 신유형의 방송광고를 도입했고 모바일 금융결제 시 공인인증서 결제의무를 완화해 모바일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의료·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 관련 법률의 제·개정 처리가 지연되고,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 등으로 규제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서비스산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체감도는 높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개방과 경쟁 도입이 부족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성과에 대한 점검·평가를 토대로 지연 과제를 가급적 마무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부문별 추진과제를 선정,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부족했던 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가시적 성과가 큰 법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개정안이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이므로 동일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수부처와 연관되는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당정 협의를 추진해 법 개정의 모멘텀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소화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의 경우

실현 가능성 및 소비자 편익증대 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 내에서 소화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의 구입불편 해소방안을 우선 마련한 후 의약품의 상시적 분류시스템 구축방안을 향후 검토하는 방식이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의료 분야의 경우 관광비자 발급 제출서류 간소화, 해외환자 유치기업의 업무범위를 여행업자의 업무범위까지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유도하고,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성장에 대응해 병원·의료서비스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외국교육기관 유치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확대하고 주요국에 비해 인센티브 지원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관광레저 분야의 경우 부족한 수도권 지역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보급자리 주택지구 중 적정지역을 선정해 호텔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민박,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 Residence, 호텔식 임대형 주거시설) 등 기존시설의 숙박시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비해 저가관광의 폐해 방지를 위해 중국전담 여행사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중국인 관광객 특화거리 조성, 전문식당 확충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을 활용한 수변 생태관광 활성화 등 국내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자격사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사형태 제한 완화, 경력요건 완화, 전문자격사 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조달이 용이한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법무사법인 설립을 허용해 대형회를 유도하고 법인설립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약국의 경우 합명회사 허용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법무사법인 구성원의 경력요건을 현행 10년에서 7년

으로 완화해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간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부족했다. 특히 미합의 쟁점과제,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 사안 등에 대해 협의·조정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미흡했고 과제 중심의 단기적 접근으로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방향 및 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했다. 또한 세제·재정지원 등에서 제조업과의 차별을 개선했으나 제조업 위주의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

올해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성과에 대한 점검·평가를 토대로 자연과제를 가급적 마무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부문별 추진과제를 선정,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부족했던 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10년 신설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일정 규모의 설비투자를 전제로 한 세제지원으로 실제 설비투자가 많지 않은 서비스산업의 경우 지원효과가 미미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정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재정·세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원 인프라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추진체계 마련 등 해외진출 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향후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확정할 예정이며 추진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윤성욱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sungyoon@most.go.kr

2015년 디자인 경쟁력 세계 7위로 도약

디자인산업 육성 종합계획

흔 히 21세기는 기술과 감성의 융합시대라고 한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것만으로는 더 이상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성요소를 대표하는 ‘디자인’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정부는 지난 4월 27일 ‘디자인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 디자인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2015년 디자인 경쟁력 세계 7위’라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자인 국가경쟁력 매년 떨어져

21세기에는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소득증대로 소비패턴이 고급화되고, 성능보단 디자인이 구매 결정에서 우선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 상당수는 시장 성숙기에 도달했으며 기술과 품질 면에서 경쟁국 간 격차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창의적 사고와 직관을 통해 소비자의 감성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디자인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지표인 디자인 국가경쟁력만 보더라도 2007년 세계 9위에서 2010년 10위 이하로 밀려났다. 또한 국내 디자인 시장규



지난 5월 6일 전주시 한옥마을의 공예품전시관에서 열린 한지국제패션쇼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한지 의상을 선보였다. 패션쇼에서는 국내의 디자이너 40여명이 한지를 소재로 만든 웨딩드레스와 한복, 핸드백, 액세서리 등을 소개했다.

모와 고용도 감소 추세에 있다. 2008년 5조2천억원대의 국내 디자인시장이 2010년에는 5조1천억원대로 소폭 감소했고, 같은 시기 5만4천명이던 고용도 5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디자인산업은 대기업에선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관심과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만이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그 기업들도 투자금액 1억원 미만인 대다수(6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에선 한정된 국내시장으로 인해 디자인 전문기업 간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3천여개의 디자인 전문기업이 대부분 소규모이고 역량도

기술개발 이후 디자인을 첨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디자인을 R&D의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참여토록 하는 디자인 융합형 R&D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지식경제부 기술개발 과제 중 상용화를 전제로 한 46개 R&BD 과제에 이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스타일링에 치우쳐 부가가치가 높은 종합 디자인컨설팅 능력이 부족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정부정책 차원에서 디자인 R&D에 대한 지원이 상당기간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소액·다수·단품 위주의 지원으로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내 디자인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제품개발 전 과정에 디자인 요소 강화

디자인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 7위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디자인을 산업경쟁력 제고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기술개발 이후 디자인을 첨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디자인을 R&D의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참여토록 하는 디자인 융합형 R&D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지식경제부 기술개발 과제 중 상용화를 전제로 한 46개 R&BD 과제에 이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아울러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해 미래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Needs)를 예측하고 선형 디자인을 발굴하는 'Design of the Future' 사업을 신설한다. 올해 중 8억원을 투자해 로봇 R&D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성과분석을 통해 이후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R&D·디자인 연구조합'을 설립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덕연구단지 R&D·디자인 연구조합'을 설립해 대학, 디자인회사, 연구소, 컨설팅회사 등 17여개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자체 디자인 부서를 보유한 중견기업 또는 디자인 전문기업의 우수 디자인 연구소를 대상으로 디자인 기술 개발, 장비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대구·광주·부산의 3개 지역디자인센터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디자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119사업'을 강화하고 향후 이를 전국 25개 거점 산업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디자인 전문기업과 전문인력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하고 디자인 개발, 상품기획, 생산, 유통

등 전 비즈니스 영역을 지원한다. 또한 디자인 전문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돕는다. 중국 Ningbo(寧波)에 설치된 디자인 센터를 올해 중 이탈리아로 확대하고 베트남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이머징 마켓을 대상으로 디자인컨설팅, 세미나, 교육 등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디자인 업계와 대학 간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 지향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자인 신학 협의체'는 디자인과 공학·경영학·인문학 등이 융합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 융합형 디자인대학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다음으로 글로벌 스타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기존 디자인 인재 육성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의 우수 디자인 인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전국 3개 지역디자인센터에서 운영 중인 '지역디자인 멤버십 사업'(필자 주; 지역대학의 우수 디자인 전공자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지역디자인센터에서 창작공간, 장비, 교육, 취업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한다. 색채, 디자인 신소재, 표준 UI(User Interface), 패키징 등 디자인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기반기술을 발굴한다. 역사·문화 등에서 한국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발굴,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한국 디자인 DNA 정립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올해 초 실시한 에너지 고지서 개선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 분야에 국한된 공공디자인을 다른 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국방·고용 등 분야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도 부처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수경
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 사무관
hsk77@mke.go.kr



FTA 활용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한 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가 가능해졌다. EU 시장은 2009년 기준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16조4천억달러로 단일 경제권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한·EU FTA 발효는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의 교역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로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향후 10년간 최대 5.6% 늘어나고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및 소득증대로 소비자 후생수준은 GDP 대비 3.8%, 약 320억달러 정도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대폭 간소화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 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FTA의 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FTA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내 기업의 FTA 활용도·특혜관세 적용 대상품목의 수입(출)액 대비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출)액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수출기업이 수출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세관·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했고, FTA 활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을 올해 중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기업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FTA 체결국의 시장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FTA 상대국 기업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현지 해외 설명회와 FTA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등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EU FTA 발효에 대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기업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에 추진하고 있다. 한·EU FTA는 건당 6천유로(한화 약 900만 원) 이상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 4월 말 현재 전체 대상 8,206개 기업 중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859개로 기업 수 기준으로는 10.5%, 대EU 수출액 기준으로는 64.5%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최대한 많은 수의 중소·중견기업이 한·EU FTA 발효 전까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해 인증수출자 지

축산 농가가 폐업하기 위해 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면적 990m²(300평)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0)세율 적용기간을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소득보전직불제도의 발동기준은 현행 기준가격 대비 80% 이하 하락에서 85% 이하로 완화하고, 보전비율은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가격 차액의 85%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지난 3월 2~4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1 FTA 박람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국내 3DTV를 살펴보고 있다.

정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10년간 2조원 투입

FTA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들의 FTA 활용 여건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시장 개방으로 타격을 받을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는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수립한 종합대책 성격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대처해 나가되,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축산 분야의 경우, 10년간 2조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해 양돈,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축사시설 현대화 및 방역관리 강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이와 함께 축산업을 가업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 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며, 축산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기자재(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등)를 중심으로 부가세 환급대상을 현행 12개에서 22개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R&D 부문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5년

간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올해 4월, 5월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논의하면서 여야 정 합의로 피해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축산 농가가 폐업하기 위해 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면적 990㎡(300평)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0)세율 적용기간을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 농수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농어업인의 직접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보전직불제도의 발동기준을 현행 기준가격 대비 80% 이하 하락에서 85% 이하로 완화하고, 보전비율은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가

격 차액의 85%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 상업보전구역을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등 SSM 규제도 강화했다. 이와 같은 지원대책은 6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반영될 것이다.

FTA는 우리나라처럼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FTA가 수혜 분야와 피해 분야가 분명히 드러나는 '양날의 칼'과 같은 측면을 지니고 있음에도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FTA를 통한 개방과 경쟁을 우리의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되,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한·EU FTA 발효 이전까지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농어업 등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남경필



백승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부내대책본부
총괄기획팀장
sjbaek@mostf.go.kr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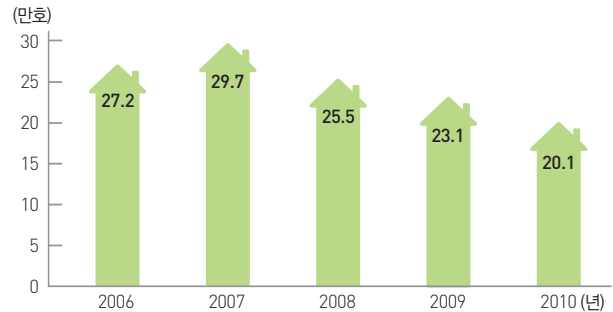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주택시장 안정은 국민들의 삶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수급 균형이 요구된다. 정부는 집값·전셋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거래량, 공급, 분양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주택수요 진작·억제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수단을 통해 주택수요를 완벽히 관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실거주 수요에 기초한 전월세의 경우 관리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이 적정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1~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소형 주택,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등 주택수요의 패턴도 점차 변화되고 있어 이러한 수요변화에 맞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토지이용·건축 규제를 과감히 개선

최근 주택공급 상황을 보면 신규 주택건설 인허가가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3년 연속으로 40만호에 미치지 못하고, 신규분양도 2007년 29만7천호에서 2010년에는 20만1천호까지 감소하는 등 위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신규주택 인허가의 감소는 2~3년 뒤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져 매매와 전월세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신규분양이 감소할 경우 당장 매매수요 흡수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나아가 주택건설시장이 위축되면 고용과 내수경기,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5월 1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림〉 주택공급 분양실적



첫째,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 확대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토지이용·건축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나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단독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층수와 가구 수 규제를 완화해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중규모(100~300호)의 집단취락을 해제한 경우 지자체장이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 층수 제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적 정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해 용적을 한도 내에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택공급도 늘리는 동시에 다양한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평균 가구 수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해 중소형·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

주택에는 침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2~3인 가구의 주택수요도 흡수할 수 있게 했다. 2가구 이상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형 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평형을 중소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택지 공급 시에도 중소형 주택을 위한 부지를 전체의 60%에서 70%로 확대해 중장기적인 수요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30세대 미만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외의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건축허가 절차를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리츠·펀드 통해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셋째, 미분양을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건설사의 주택공급 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펀드·신탁회사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주고, 적용기간도 2011년 4월 말에서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과천·수도권 5대 신도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2년 거주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넷째,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해 매매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우선 리츠·펀드 등 특수법인도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기관리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 관리업'을 신설해 리츠·펀드 등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택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주고, 적용기간도 2011년 4월 말에서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과천·수도권 5대 신도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2년 거주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 지구의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을 해제하되, 사업이 진행 중인 뉴타운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건축제한고시를 철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공급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 이후 실제 입주까지 통상 2~3년의 건설기간이 소요되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 등 중소형 주택도 6개월~1년여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택수요가 나타나기 이전에 주택공급이 앞서서 이뤄져야 향후의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에서 주택 수급상황과 국민들의 주택수요·선호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다양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돌아오는 가을 이사철, 나아가 2~3년 뒤의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jhh3240@yahoo.co.kr



불안한 '액티브X' 대체 적극 추진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추진 계획' 발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자랑하는 인터넷 강국이다. 그러나 불명예스럽게도 외국에 비해 비표준 웹기술이 많이 사용돼 웹호환성이 떨어지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면에서는 후진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표준으로만 구현되는 모바일환경에서는 웹호환성 문제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편적인 웹접근성 보장과 웹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선진적 인터넷 이용환경 구현을 목표로 지난 3월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비표준 기술인 액티브X, 악성코드 감염경로 될 수도

우리나라는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동작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티브(Active)X(필자 주: 사용자가 동영상, 다운로드, 공인인증 등 웹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PC에 자동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기술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국내의 웹사이트의 액티브X 사용 여부 조사 결과 국내는 100개 중 72개, 국외는 20개 중 1개 사이트 사용)하고 있다. 구버전 웹브라우저 사용률도 높다. 액티브X로 구동되는 공인인증, 개인방화벽, 키보드 보안 등과 같은 특정 서비스는 IE 이외의 다른 웹브라우저(Firefox, Safari, Chrome 등) 사용자에게는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는 IE 이외의 브라우저가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다. 액티브X의 이러한 특성은 비표준 웹 환경을 강화하고, 이는 다시 액티브X 사용을 더욱 확산하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또한 액티브X는 악성코드 감염경로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3.4 DDoS'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1년간 실태 조사와 개선방안 및 지원사항을 마련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0일 '액티브X 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워크숍' 모습

2009년의 '7.7 DDoS' 공격 시 우리나라에 좀비 PC가 많았던 이유로 액티브X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는 액티브X 대체기술 적용 확산, 브라우저의 다양성 확보 및 웹표준 기술 확산 등이다.

먼저 액티브X의 주요 구현 기능인 보안, 파일처리기술, 그래픽·차트 표현, 멀티미디어 재생 등에 대한 대체기술을 개발·보급하고자 한다. 인터넷기업협회 등 단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하며, 매해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금융·포털·게임 등 국내 주요 100대 사이트를 선정해 2014년까지 금융(로그인, 방화벽), 포털

(전자결제, 파일 업로드, 게임(키보드 보안) 등 사이트 특성에 맞는 직접적인 액티브X 대체기술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웹서비스 제공자 및 개발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앞서 언급한 주요 100대 사이트는 물론 P2P(Peer to Peer; 유저 간 파일공유 방식) 및 개인쇼핑몰 등 취약 사이트 기술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관의 액티브X 대체기술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등 유관협회를 통해서도 동일한 기술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IE에 편중된 웹브라우저 이용환경과 구버전인

악성코드 감염경로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액티브X에 대한 대체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주요 100대 사이트를 선정해 특성에 맞는 액티브X 대체기술을 컨설팅하며, 브라우저의 다양화 및 웹표준 전문가에 대한 인증제 도입으로 웹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IE6 사용률이 높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웹브라우저 업그레이드 캠페인, 멀티 브라우저 이용 캠페인 순으로 진행한다. 정부·공공, 인터넷기업, 게임업계(PC방) 3개 부문으로 나누고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 네티즌 대상으로는 포털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브라우저 다양화 위해 인증사이트에 마크 부여

멀티 브라우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캠페인과 더불어 온라인 지원체계(웹 기술지원센터, <http://web.kisa.or.kr>)를 통해서도 진행된다. 웹 기술지원센터는 각종 브라우저별 기능 소개와 다운로드를 제공하며, 액티브X 대체기술 및 웹표준(HTML5) 기술동향 등을 제공한다. 웹 개발자 및 제공자를 대상으로는 '멀티 브라우저 인증제'를 도입해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이 가능한 웹사이트 구축을 유도할 것이다. 인증된 웹사이트는 별도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웹 기술 지원센터'에도 등록해 홍보할 계획이다.

차세대 웹 국제 표준문서인 HTML5(기존 텍스트와 그림 중심으로 표현되는 기술 중심인 HTML4에 멀티미디어 가능, 게임 및 이미지 편집 등이 웹 자체적으로 구현되게 하는 국제 표준문서로 World Wide Web Consortium, 즉 W3C에서 국제 표준화를 추진 중)

사용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HTML5 KIG(Korean Interest Group; W3C HTML5 작업반 산하의 한국을 대표하는 관심그룹으로 한국에서의 표준화 이슈들을 발굴하고 HTML5 국제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W3C 공인 표준화 조직)와 연계한 국제표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HTML5 KIG를 통해 국제 웹표준 전문가 발굴은 물론 단일화된 창구로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 대응·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웹표준 전문가에 대한 인증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웹표준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인증기준,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웹표준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계획이다. 인증된 웹표준 전문가 또한 '웹 기술지원센터'에 등록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웹표준을 준수한 우수 웹사이트나 웹응용에 대한 포상도 추진된다.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관의 웹 어워드 시상 분야에 '표준화 부문'을 신설하고, 아울러 공공 분야 웹사이트에 대한 '웹표준 적용 우수 사이트' 시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웹 개발자가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웹표준 적용 모범사례와 가이드라인도 보급할 예정이며, W3C 한국 사무국과 공동으로 HTML5 등 최신 웹표준 문서에 대한 해설정보를 한글본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정부는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행 모델을 설정했다. 즉, 정부는 액티브X 대체기술 보급과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민간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액티브X 사용은 줄이고 보안성은 높이며, 멀티 브라우징이 가능한 웹표준 환경이 조성돼 국내 웹사이트 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다. 나미경제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jphong@kcc.go.kr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를 대표하는 삼한사온은 사라지고 유례없는 한파가 지속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영상이었던 시간은 단 44분.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이번 한파가 북극의 기온이 평년보다 약 10도가량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난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했고 지난 1월 17일에는 사상 최대치인 7,313만kW를 기록했다. 전력공급 예비율은 5.5%로 낮아져 대규모 정전사태의 우려도 제기됐다.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정부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를 확정·공표했으며, 2010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장기능을 활용해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지난 4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개별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에 따른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은 배출허용량보다 초과 배출이 예상될 경우 배출권을 구입해 배출허용량을 충족하고, 배출허용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에는 잉여 배출권을 매각할 수 있는

배출권 구입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최초 계획기간에는 총 배출권의 95% 이상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에서 의무적 또는 자발적 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목표관리제는 개별 업체에게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해당연도 직후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목표 미달성 시 제재를 가하는 제도로, 직접규제 방식에 기초한 온실가스 감축제도다. 목표를 초과달성(배출량 초과감축)해도 인센티브가 없으며, 목표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강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감축목표보다 초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잉여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자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감축사업의 비용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의 구입비용이 저렴할 경우엔 배출권을 구입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목표관리제보다 제도적 유연성이 탁월하고, 감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목표관리제 적용업체 중 일정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대상으로 전환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법안에서는 목표관리



지난 5월 11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종합대응체제 발족식'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협약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외 배출권 거래제의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목표 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온실가스 배출업체가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목표관리제의 적용은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제도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에서 개별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면 목표관리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감안하도록 했다.

배출권 거래제,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모멘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산업계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이 아직 우리에게 낯설고,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므로 기업의 원가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업종별 단체 및 주요 기업과의 연쇄 간담회, 관계부처 차관급 및 장관급협의, 두 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통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마련했다.

첫째, 정부는 5년 범위 내에서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수량,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등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둘째, 배출권 구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최초 계획기간에는 총 배출권의 95% 이상을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이후 계획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무상할당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생산시설의 신·증설 등 개별업체의 경영상황이 달라진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여건변화에 대한 제도운용의 탄력성을 도모했다. 넷째, 개별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배출허용량의 범위에서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별 업체의 배출량은 전문기관의 검증과 정부 인증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다섯째, 개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경우, 초과 배출량의 톤당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담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2007년 기준 에너지 소비량은 2억2,200만 toe로 세계 10위 수준이며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toe/천달러)는 2008년 기준 0.30으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0.10는 물론 OECD 평균인 0.18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석유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자원의 96%를 해외에 의존하고 관련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 4,452억달러의 29%인 1,217억달러에 달한다.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경제산업 구조로는 자원고갈, 에너지 수요 급증 등에 따른 에너지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국가의 녹색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근본적 의미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기술, 녹색교통 등 녹색신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맞는 거래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관련 이해당사자와 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나



정도현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장
dohyuni7@korea.kr

동해안권, 관광·에너지의 '블루파워벨트'로 거듭난다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밑그림으로만 제시되던 동해안권에 대한 청사진을 '동해안권 및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으로 확정했다. 이 계획은 서해안권과 함께 발표됐지만 강원, 경상북도 및 울산에 속한 15개 시·군·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감회는 남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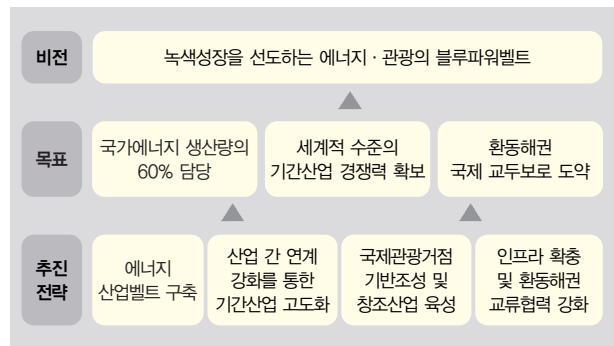
전국 에너지 생산량의 60% 담당하게 돼

이 계획은 2020년까지 119개 사업에 24조8천억원을 투입해 동해안권을 에너지 및 관광벨트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선 전국 에너지 생산량의 60%를 이 지역이 담당하도록 하고, 특히 이 지역에 집중돼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해 동해안을 살릴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원자력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이미 울산에는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입주할 예정이고, 경주에는 양성자가속기센터가 건설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선 동해안이 지닌 천혜의 자연자원과 더불어 경주·삼척·강릉 등에 산재한 문화자원을 엮어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동해안의 몇 개 도시는 환동해권의 관광과 교류거점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최근 '보는 관광'이 쇠퇴하면서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새로운 관광 활력을 찾기 위해 고심해 왔다. 따라서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을 확대하고 해양데포츠 단지가 들어서면, 바야흐로 동해안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해

〈그림〉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자료: 국토해양부



양체험관광지로 변모할 것이다.

산업 분야에선 삼척·동해·포항·울산 등에 산재한 소재기업들을 연계해 신소재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포항의 철강·신소재, 경주의 자동차·조선 해양부품과 울산의 자동차·조선해양산업을 연결해 핵심 기간산업 경쟁권을 형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이 계획대로 달성된다면 동해안은 새로운 이름인 '블루파워벨트'(Blue Power Belt)가 의미하듯 푸르고 에너지가 넘치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보는 관광'에서 문화자원을 활용한 해양체험관광지로

사실 동해안은 여름 한철 여가를 즐기러온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쌓인 피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장소로 기억되는

지역이지만 정작 터전을 잡고 살아 온 사람들에게는 불편과 소외가 뒤 영긴 지역이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도로 사정이다. 전국이 만나질 생활권이 된 지 오래지만 동해안을 있는 국도는 지난해에야 왕복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됐고 지금도 고속도로와 철도는 단절돼 있다. 내륙과 연결되는 도로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면 동해안권은 실제로 다른 권역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가? 서해안권은 중국의 개방 이후 거리 이

점으로 많은 발전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해 각종 인프라가 집중되고 군산·당진·아산 등에 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기업 투자가 증가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도시가 내륙과 연결돼 있다. 남해안권도 광양·거제 등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남해안을 따라 인프라가 촘촘히 깔려 있고 내륙과 연결된다.

그런데 동해안의 꼭지 도시인 속초와 남쪽 끝 도시인 울산 사이에는 강릉과 삼척 사이를 제외한 구간에 고속도로가 없다. 이와 같은 열악한 도로 환경은 동해안권 개발계획이 착실히 시행되면 매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계획은 장밋빛이지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위해선 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될 것인가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동해안 인프라와 관련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언론이 주목한 것은 동해안의 열악한 도로 사정이 아니라 정치인에 의한 예산 배정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동해안에 있는 15개 시·군·구에 사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이 지역의 발전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도로 사정만 좋아진다고 소득이 높아지고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이다. 이번 계획에는 사실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다. 거의 모든 분야가 강원, 경



동해안권은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을 확대하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해양체험관광단지가 될 전망이다. 관광객들이 강원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수욕장에서 dinghi 요트, 바다 카약 등 다양한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상북도 및 울산 3개 지역이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 특히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가 혼재돼 있어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알력만 생기고 사업은 걸들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거점 간의 연계가 어느 정도로 긴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질 것인가가 각종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동해안의 거점 도시들은 나름대로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고 어느 정도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도시도 다른 지역과 연계하지 않고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각 지역이 서로가 가진 장점과 자원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그 지역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잘 메운다면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묘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술에 배 부르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완전하지도 않고 중앙정부가 무상으로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미 오랫동안 이 지역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기다릴 줄 알며 남을 탓하지 않는 미덕을 갖고 있지 않은가. 지역경제



김문연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
mykim@udi.re.kr



‘녹색국가 대한민국’ 우리 손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감축 연구, 저탄소사회 구현 연구,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후변화연구동’은 건물에서 온실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업무용 건물 중 세계 최초의 ‘탄소제로건물’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 바쁘게 뛰고 있는 그들의 어깨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바쁘다>에서 그들이 일하는 현장을 구경해 보실까요?



세계 최초로 건립된 탄소제로건물 '기후변화연구동' 전경



홍유덕 과장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로 설정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감축에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업은 녹색 신산업 창출, 녹색경영 기반 구축, 저탄소 기술 선점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 부문의 감축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국민은 의·식·주 생활 개선 등의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열정으로 뚝뚝 뚫힌 연구원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통계시스템을 구축했다. 가정, 상업·공공, 수송 부문에서의 감축잠재량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국민 스스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연구과의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연구동'은 건물에서 온실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업무용 건물 중 세계 최초의 '탄소제로건물'이다. 건물은 한번 건설되면 장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로 비산업 분야의 배출 비중인 약 42%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 활동에 의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온실가스로 인해 미래 기후변화의 급진적인 진행이 예상되고 있으며 보건, 생태계, 사회·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의 부정적 영향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변화연구과는 이러한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연구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열정으로 뚝뚝 뚫힌 온실가스 통계전문 3인방인 임철수 연구사, 신선아 연구사, 이수빈 연구사는 녹색생활의 실천 및 감축수단에 의한 감축량의 정량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GHG-CAPSS)을 개발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248개 지자체의 배출통계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것이다.

패기 넘치는 이동원 연구관, 진형아 연구사 그리고 여소영 연구사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푸드마일리지의 단축, 쿨·온맵시(편집자 주: 냉난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여름에는 벡타이를 매지 않



(왼쪽부터) 이동원 연구관, 유정아 연구사



박영남 실무관, 진형아 연구사



이재범 연구사, 여소영 연구사, 신선아 연구사

고, 겨울에는 내복을 입는 캠페인, 자동차요일제 준수 등 녹색 생활의 실천만으로도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어주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녹색생활의 실천은 국가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며, 비용효율적인 감축수단 중 하나라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아도 내일을 위한 투자”

탄소제로건물은 다재다능한 이재범 연구사와 부드러운 미소의 소유자인 박영남 실무관의 환상적인 호흡을 통해 탄생했다. 세계 최초로 지어진 업무용 탄소제로건물은 기존 일반건물 건축과는 매우 달라, 수많은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이었다. 탄소제로건물인 기후변화연구동은 벽체를 두껍게 한 슈퍼단열, 아르곤 가스가 충전된 3중 슈퍼창호, 자연에너지인 태양광·열 및 지열을 사용하는 기술 등 총 66가지 기술을 적용했다. 이 연구사와 박 실무관은 이 건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 기존 근무환경에 비해 쾌적해진 환경으로 인해 연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지구를 살리는 탄소제로건물이 더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 건물을 지어 국민들에게 우

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차분하면서도 과단성을 지닌 송창근 연구관, 위성연구에 푹 빠져 있는 최원준 연구사,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민감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약성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유정아 연구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연구에 분주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선제적인 적응대책 마련은 부정적 영향에 따른 피해를 감소시켜 경제적 비용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들은 또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기후변화를 감시하기 위해 2018년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후변화 연구를 진두지휘하는 홍유덕 과장은 과원들의 연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영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와 전문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켜 준다.

기후변화연구과의 업무는 단번에 성과가 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과 구성원 모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녹색지구를 위해, 후손의 안녕을 위해 오늘도 내일을 위한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 **미래경제**

글 이재범 연구사



탄소 'Zero' 에 도전한다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로(0)화한다? 그래서 탄소배출 제로라고?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냉·난방을 하지 않고, 불을 켜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기사는 5월 16일 인천 서구 난지로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을 찾았다.

현재 우리나라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총배출량의 약 20%. 상당히 많은 양으로 이를 줄이지 않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은 공허한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탄생한 건물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치한 탄소제로건물인 기후변화연구동이다. 건물 내 소비되는 에너지를 슈퍼단열, 슈퍼창호 등 건물 에너지부하 절감 기술(이하 'Passive')을 이용해 총에너지의 40%를, 태양열·광, 지열의 자연에너지 기술(이하 'Active')로 60%를 절감할 수 있다. 연구동에 적용된 기술만 건물 에너지부하 절감 기술(30종), 건물 에너지기술 효율 기술(18종), 신재생에너지 기술(13종), 친환경 요소 기술(5종) 등 국내기술 62종, 외국기술 4종에 달한다. 이 중 핵심기술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관련 기술은 100% 국내에서 개발한 것이다.

건물은 남향에 위치해 있어 창문 외부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통해 햇살이 들어와 자연채광만으로도 업무가 가능하다. 흐린 날, 햇볕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인쪽 내부는 국부조명을 이용한다. 단열 강화를 위해 지붕·벽·바닥은 일반건물에서 사용되는 60~80mm보다 더 두꺼운 125mm 단열재와 방습층 및 아르곤가스가 들어간 3중 로이(Low-e) 유리를 사용했다. 기본적으로 전기공급은 태양광, 냉·난방은 태양열·지열을 이용해 공급한다. 태양열과 지열이 상호보완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열에너지 공급효율을 높은 부분이 인상적이다. 또한 그린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력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최적화된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졌다. 단열에 신경 쓰다 환기 측면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 물었다.



기후변화연구동은 에너지 부하절감 기술과 자연에너지 기술 등 총 66가지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졌다. 사진은 일조량에 따라 자동제어 되는 블라인드가 설치된 연구동 실내 모습

“천장에 위치한 자동자연환기 시스템이 보이죠? CO₂수치를 항상 체크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나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게 됩니다.” 안내를 맡은 이재범 연구사의 말이다.

이런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된 탄소제로건물의 연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은 100 CO₂·ton, 100 CO₂·ton은 2천cc 소나타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을 500회 왕복할 때 나오는 탄소량이다. 가히 엄청난 양이다.

그러면 건설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탄소제로건물의 공사비는 단위면적당 355만원입니다. 특수목적 일반건물(연구·전시 및 관람) 공사비 262만원과 비교하면 약 1.4배, 93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지만 Passive 기술로 4,900만원, Active 기술로 5,300만원 등 연간 약 1억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물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면 투자비 회수기간 이후의 수익은 약 7억3,4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증모델이자 이정표가 될 탄소제로 건물! 환경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나라경제

사과하지 않는 그 남자의 소통

최 근 그 잘 나가는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에게도 사과할 만한 일이 발생했다. 자신들이 추적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아이

폰4의 안테나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적 결점이 아닌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힘든 문제. 그러나 잡스는 사과하지 않았다. 문제가 제기된 후 일주일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사과 아닌 변명을 내놓았다. 이는 또 다른 스마트폰인 안드로이드를 통해 역시 사용자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왔다고 밝혀진 구글이 지적 하루 만에 “사용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익명화해서 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고 해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는 한 인터넷매체와 가진 전화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이 수집한 것은 무선전화 기지국의 위치일 뿐이고 이는 실사용자와 16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사용자 위치로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1년이나 저장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버그 때문이며 몇 주 안에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우리가 사용자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인 그는 해명과 답변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그래도 답변을 내놓는 데 일주일도 안 걸렸다”고 항변하기까지 했다.

스티브 잡스의 발언들은 위기 발생 시 나쁜 대응태도의 종합선물세트였다. “우리는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한 적이 없다” - 부인(I didn't do it). “버그로 1년 간 저장된 게 사실이지만 손볼 것이니 괜찮은 것이 아니냐”는 항변과 “답변을 내놓는 데 일주일도 안 걸렸

다” -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it wasn't so bad). “위치 정보를 수집하긴 했다. 그러나 그건 사용자 위치가 아니라 그들과 꽤 떨어진 기지국의 위치였다”와 “일주일 걸렸지만 문제파악과 정리에 시간이 걸렸다” -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Yes, but).

그의 발언에서 사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건 그나마 자신들이 사용자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애매하고 오만한 인정뿐이다. 그 또한 정확한 의미의 사과라고 볼 수 없다. 구글이 해명한 내용도 사과라기보다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글은 하루 만에 공식 발표의 자리를 마련했다.

스티브 잡스가 몇 년 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 중에 등장해 유명해진 문구 “Stay hungry, stay foolish”(늘 배고프고 늘 어리석어라)는 성공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는 인간이 될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잡스의 초심엔 기업의 잘못과 실수가 있더라도 절대 직접 사과하지 말자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던 걸까. 아님 그저 어리석기 때문이거나 더 큰 성공에 굶주려 사과가 그 성공의 시점을 늦춘다고 여기기 때문일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잘못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잘못 이후에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잘못은 말 그대로 새옹지마,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최근 사과가 오히려 단골을 만들고 의료사고 시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확률을 낮춘다는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사과에 대한 책이 나왔다. 그러나 그런 득실을 따져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정당하고 옳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하고, 그런 진심의 사과가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히 예감하건대, 스티브 잡스가 최근의 사례처럼 사과를 배제한 소통을 계속하는 한 아이폰과 맥북의 앞날은 밝지 않을 것 같다. 김민정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정아
방송인/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연구위원
jayoo7@sun.ac.kr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89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KBS 9시 뉴스', '열린 음악회' 등을 진행했다. 1997년 퇴사 후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KBS 1라디오 '명사초대석' 과 국회방송 '원로에게 듣는다' 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유정아의 클래식 에세이, 마추픽, 「유정아의 서울대 말하기 강의, 등이 있다.

금융보안, 이대로 좋은가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을 이용한 비대면거래가 무려 86.2%. 직접 창구에서 거래하는 것은 10%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금융에 있어서 IT보안은 절대적인 것이 돼 버렸다. 그러나 현대캐피탈 해킹에 이은 농협 전산마비 사태 등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들은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든다. 어느 순간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날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온 국민의 눈을 금융기관의 보안체계에 쏠리게 만들었다. 『나라경제』는 현장전문가들을 만나 금융보안 사고의 원인과 대책, 금융보안의 발전방향을 들어봤다.

금융보안 IT예산 '5% 룰' 대부분 미달

‘전자금융’이란 금융자동화기기(CD/ATM), 휴대폰, 인터넷 등 각종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비대면거래’를 말한다. 최근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9개 금융기관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실적이 일평균 389만건, 2,180억원(금액)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70.5%, 79.5% 증가했다.

전자금융 서비스의 고도화는 초고속 인터넷 등 풍부한 네트워크 자원과 통신서비스, 모바일 디바이스의 혁신이 어우러진 결과다. 금융산업은 이제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에서 ‘IT장치형 산업’으로 탈바꿈했다.

우려가 현실로... ‘전자금융의 위기’

그러나 최근 IT 중심의 금융서비스 확산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치명적 보안사고로 인해 금융거래의 80% 이상을 책임져왔던 전자금융 시스템 체계가 위협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농협과 현대캐피탈의 해킹사고는 그 사고의 기법과 피해 범위에서 매우 큰 충격을 줬다.

현대캐피탈 해킹사고의 경우, 해커들이 고객정보를 빼내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해킹프로그램을 침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개월이 넘도록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데이터 암호화도 미흡해 고객정보가 무더기로 노출됐다.

지난 4월 12일, 농협 전산마비 사태는 고객의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 이전에도 백업시스템까지 마비돼 일부 거래 원장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전산사고로 금융회사가 외부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이례적이다.

검찰은 지난 5월 3일, 농협 사태가 북한 해킹부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사이버테러 행위라고 발표했다. 처음에

는 농협 내부자에 의한 고의적 범죄 가능성도 제기됐었지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했더라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농협의 관리책임은 가벼워질 수 없다.

‘IT강국이란 타이틀에 스스로 도취됐다’는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금융권이 전자금융서비스 시장의 양적 성장에만 매달렸을 뿐 보안강화와 같은 질적 투자에 소홀했던 결과가 이번 사고로 여실히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금융보안 사고의 원인으로 보안투자의 미흡, 보안전문 인력의 부족, 경영진의 보안불감증 등을 꼽고 있다. 이 중 ‘보안불감증’은 금융권이 큰 비용을 들이더라도 치유해야 한다.

지난해 금융권에선 스마트폰 기반의 banking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였지만 일각에선 “금융회사들이 보안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모르겠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 불안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새로운 서비스에 열광하는 시장분위기에 묻혀버렸다.

최근엔 금융회사 ‘내부자에 의한 범죄’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내부자에 의한 사고는 가장 위험하고, 그 피해가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미 해외에선 고려해야 할 가장 중대한 ‘리스크’로 꼽혀왔다. 하지만 국내에선 NAC(네트워크 접근제어) 등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인색한 보안 IT예산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융회사에 총 IT예산 대비 약 5%선에서 보안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왜 ‘5% 수준’을 권고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최소한 그 정도의 보안투자는 필요하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많은 금융회사들이 5%에 미달, 사실상 보안을 등한시해왔다.

이는 금융회사들의 IT투자 여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안은 IT투자항목 중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다. 그나마 한 해 1,500~2,500억원의 총 IT예산을 편성하는 시중 은행의 경우, 연간 80~130억원 안팎에서 보안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물론 '5%룰'로 따지면 은행도 기준에 미흡하지만 그래도 금융권에서 가장 고도의 보안체계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이병하 수사과장이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내 17개 은행의 IT 총예산은 평균 1,124억원이다. 올해는 1,475억원으로 약 351억원, 23.8% 정도 늘었으며 그와 비례해 보안투자 예산도 10% 정도 늘었다. 제2금융권에선, 증권사(조사대상 10개 증권사)의 지난해 평균 총 IT예산이 425억원이었는데 올해 462억원으로 7.9% 늘었다. 생명보험(5개사 조사)은 지난해 687억원에서 올해 695억원으로, 손해보험(5개사 조사)은 지난해 820억원에서 올해 933억원으로, 신용카드(5개사 조사)는 지난해 753억원에서 올해 1,145억원으로 각각 IT 총예산이 증가했다. 그러나 총 IT예산의 증대와는 크게 관계없이 보안투자비의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전문가, "IT예산 중 보안 비중 20~30%선으로 높여야"

보안전문 인력의 확충도 현안이다. 대체로 200~300명 수준의 IT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의 경우, 보안전문 인력은 10여명 남짓으로 10%가 안 된다. 제2금융권은 더 열악해, 1~2명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건비 등 비용 문제로 보안인력을 크게 늘리는 것 또한 쉽지 않다. IT투자 여력이 은행권에 비해 떨어지는 제2금융권은 자체 충원보다는 보안관제서비스 등 아웃소싱을 통한 보안 취약성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물론 보안 IT를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뚫는 자와 막는 자', 보안사고는 그 속성상 끊임없이 그 과정이 반복되는 숙명적인 것이다.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보안투자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이 이제 IT장치로 산업화되고 IT의 존도가 크게 확대된 만큼 IT예산 중 보안투자 비중도 커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 룰'에 얽매이지 말고 20~30% 수준으로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올해는 금융보안 투자의 적기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5~6년간 수천억원을 투자한 차세대시스템(Next Generation), 바젤III 및 IFRS(국제회계기준) 등 필수 IT사업이 거의 모두 완료된 상황이다. 따라서 차분하게 보안을 비롯한 기본 IT인프라의 질적 경쟁력을 위한 '고도화'에 금융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박기록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기자
rock@ddaily.co.kr

“금융과 보안을 모두 아는 인재가 없다”

김덕수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이사(CTO)

1997년 설립된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은 웹과 DB 분야의 국내 최고 애플리케이션 보안 전문기업이다. 이곳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김덕수 이사는 “보안은 각 회사의 실정과 체계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권의 잇단 해킹으로 말미암아 보안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아직 직접적 수혜는 없다.(웃음) 그러나 문의전화는 많이 늘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대응할 수 없다. 예산 책정 등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실제 보안업체엔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보안과 일반 IT보안의 차이점이 있나?

크게 다른 점은 없다. 다만 소프트웨어 제공 시 금융기관 환경에 맞는 정책수립 방향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다르다. 운영에 필요한 일종의 액세서리들도 추가해 패키지 형태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IT보안전문가로서 현 금융보안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금융을 잘 아는 사람이 보안에도 관여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보안전문가가 시스템 운영은 할 수 있어도 금융을 잘 알 수는 없다. 보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금융지식이 필요한데, 두 분야를 모두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한 정책수립-기획-운영-구축까지 보안의 전 과정을 혼자서 할 수도 없다.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담인력을 두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물론이다. 그러나 전담인력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지금은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보안운영을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업무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성과도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전담인력이 있으면 보안업무의 비용과 결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 경영진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유능한 인재들도 보안 분야를 외면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이미 금융권 업무는 IT가 중심이 됐다. 그런데도 보안의 업무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인재들이 보안 분야를 꺼리는 것이다. 자연히 보안인력에 대한 처우도 낮아진다. 보안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처우나 인력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 담당자 또는 기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보안과 비즈니스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비즈니스 각 단계마다 보안작업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규제 경우 양면의 날이 있긴 하지만,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에 있어서는 법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사실 개인정보가 너무도 쉽게 유통되고 있다. 정책수준에서 필요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화도 바뀌지 않을까 한다.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감독 강화도 필요하다. 나라경제

신지원 나라경제 인터넷기자

이달의 이슈

금융보안, 이대로 좋은가 | 업계 반응

IT운영의 내실화, 각 조직의 숙제

이 글을 준비하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참 많은 영화가 해커나 개인정보 보안을 소재로 하고 있다. '스니커즈', '스워드피시' 같이 해커가 주인공인 영화뿐 아니라 '다이하드 4.0'도 전산망이 파괴돼 교통, 통신, 금융 등 네트워크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빈번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지적 사건에 한정됐던 듯싶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때문에 최근 일련의 금융보안 사고는 IT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더욱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아무도 안심할 수가 없고, 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가능성을 되짚어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점점 작업 하나하나에 긴장감이 흐르는 것도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신한은행도 예외는 아니어서, 모든 과정을 재점검하고 두세 번씩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사항을 함께 나누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우선, 보안을 위한 IT코스트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이다. 흔히 하는 얘기지만 말에 그친 감이 있었는데 필자도 이번 기회로 그 절실함을 되새기게 됐다. 농협의 경우 이번 일로 금전적 손실만 최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수년치 IT예산에 해당한다. 사고로 인한 신뢰도 하락, 고객 이탈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영진과 관리자가 이를 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라고까지는 어쩔는지 몰라도 최소한 '아끼지 말아야 할 비용'으로는 바뀌지 않았는가, 필자는 체감한다.

둘째, '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 이슈다. 사실 이번 사고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최첨단 기술문제는 아니었다. 그간의 보안투자는 새로운 기술, 기법에 대비해 방화벽을 이중

삼중 쌓고 침입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신시스템 도입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다. 물론 시스템투자도 병행할 사항이긴 하나 근본적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고 육성하지 않는 한, 갖춰만 놓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방어체계와 같아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T운영의 내실화'다. 어느 금융기관이나 인프라 운영 및 정보보호에 대한 규정과 지침, 운영 절차와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 업무 효율성 강화, 업무담당자의 편의성, 동료에 대한 신뢰 또는 확인 미흡 등을 이유로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치거나 후선으로 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도와 의식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는 여전히 보안의 허점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어떻게 이를 양립하면서 IT운영의 내실화를 이룰 것인가 각 IT조직에 남겨진 숙제다.

금융보안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은 그 공(功)이 잘 드러나지 않는 활동이다. 때때로 과(過)가 드러날 뿐이다. 어느 만큼이 안심할 만한 선인지 공감할 얻기도 매우 난해하다. 하지만 1%의 소홀한 부분에서 허점은 노출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관련 담당자 모두가 뼈저리게 인식하고 하루빨리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박민재



서춘석
신한은행 IT개발본부장
seochs@shinhan.com

금융 선진국,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성 모두 고려



호주 시드니 시내 코먼웰스 은행 ATM기를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

한국의 전자금융은 1988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비약적인 발전과 성과를 거뒀다. 특히 1998년 8월 등장한 인터넷뱅킹의 경우 2007년 청구거래량을 추월했고, 2009년엔 자동화기기(CD/ATM) 거래량을 앞지르는 등 급속히 성장했다. 스마트폰의 보급·확대 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뱅킹의 활성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가장 큰 과제는 보안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ActiveX'를 이용한 플러그인 설치방식에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웹 표준화에 준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2010년 6월 말 '전자금융감독 규정안'이 개정돼 공인인증서 외의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현재까지 금융기관 및

솔루션 업체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해외 금융선진국의 인터넷뱅킹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인증수단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미국은 18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중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45%에 달할 만큼 비교적 높은 편이다. 연방금융기관감사위원회(FFIEC)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험의 종류와 수준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인터넷뱅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적절히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 은행

인 BOA(Bank of America)와 US Bank 인터넷뱅킹은 각각 ID와 비밀번호 외에 '사이트키'(Sitekey, 온라인뱅킹 가입 시 입력했던 이미지와 이미지 타이틀을 보여줘 현재 접속한 사이트가 가짜 사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와 'ID shield' 문답을 통해 로그인 인증을 한다. 계좌이체 시엔 BOA의 경우 SMS OTP(One Time Password)와 카드 OTP서비스인 'SafePass'를 이용하고, Citi Bank는 이메일을 통한 보안인증 코드(Secure Authorization Cod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접속부터 모든 데이터는 'EV-SSL'(기존 보안 서버 인증서인 SSL의 암호화 기능을 위장하거나 피싱 사기에 이용할 수 없게 보호기능을 추가한 SSL 강화판)로 암호화해 전송되며, 사설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개인당좌계정이 발달돼 가계수표 발행을 통해 결제기능을 대부분 수행하므로 인터넷뱅킹은 대체재라기보

다 보완재에 가깝다. 2008년 CBA(Canadian Bankers Association)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뱅킹 이용률은 53%이고 이 중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이용률은 35%에 달했다.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위해서는 ID와 비밀번호, 질문·응답의 단계를 거치며, 이체서비스 이용 시 은행 공통으로 'Interace-Transfer' 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캐나다의 5대 대형은행들이 공동출자로 설립한 'CertaPay'의 이메일을 통해서만 지급이체 서비스가 가능하다. 당행이체의 경우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면 별다른 인증절차가 없으나 타행이체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의 이메일 주소, 캐나다 금융기관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서 이체서비스가 이뤄진다. 모든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SSL 암호화 통신을 이용하며, 사설·공인인증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인터넷뱅킹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작하여 배포하지 않고, 금융감독청(FSA)에서 만든 핸드북을 통해 리스크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두고 있다. HSBC(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는 로그인을 위해 사용자 ID를 입력하고 보안번호(Security number) 중 일부를 입력하는 2단계를 거치며, 이를 통해 계좌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RBS(Royal Bank of Scotland)는 인증에 고객번호, 보안번호, 비밀번호, 스마트카드 리더기 OTP를 사용한다. 스마트카드 리더기 OTP는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 후, 카드 비밀번호 및 기타정보를 입력하면 8자리 OTP넘버가 생성돼 이를 웹페이지에 입력하면 인증이 된다. 인터넷뱅킹 로그인 메뉴에서부터 EV-SSL을 사용하며, 사설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인구의 75%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이 중 41% 이상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독일 역시 독일은행연합회(BDB, Bundesverband deutscher Banken)에서 제공한 인터넷뱅킹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다. 대표적 은행인 Deutsche Bank와 Postbank를 살펴보면 모두 EV-SSL을 통해 암호화된 데이터로 통신하며, 로그인을 할 때에는 한국의 보안카드와 유사한 TAN(은행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받는 자기거래번호로 100개 이상의 묶음 숫자로 돼 있음), 카드판독기를 이용한 스마트카드의 PIN번호, Mobile TAN 등을 이용한다. 이체서비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의 인터넷뱅킹 사용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용률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관련 범죄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OTP, 휴대전화 인증, NGN(Next Generation Network, 교환기에 의한 기존전화망을 IP기술을 사용해 대체한 차세대 네트워크), IP 인증, 이미지 확인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Bank of Tokyo Mitsubishi UFJ는 인터넷뱅킹 신청 시 우리나라 보안카드와 유사한 계약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로그인 및 이체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로그인 실패 시 계정 잠금, 사용자 접속·사용패턴 저장 및 관리, 다중 방화벽(Multiple Firewall), 백업 및 보안솔루션 등 부가적인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Mizuho Bank의 경우 EV-SSL을 통해 사용자 및 거래정보를 보호하고, OTP와 제2비밀번호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한다.

호주의 인터넷뱅킹과 인터넷마켓 이용률은 2008년 63%에 비해, 최근 4% 늘어난 67%로 기록될 만큼 활성화돼 있다. 인터넷뱅킹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The Australian Guidelines for Electronic Commerce'와 금융기관의 IT정보기술에 따른 보안위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PPG'(Prudential Practice Guide)를 두고 있다. NAB(National Australia Bank)는 EV-SSL을 사용해 암호화된 데이터 통신을 하며 추가 보안시스템으로 SMS서비스 및 비밀번호 잠금기능을 제공한다.

이상 주요 6개국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감독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일관된 보안 기법이 아닌 다양한 보안기법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인인증서 대체수단으로 주로 SSL과 OTP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권에서는 부인방지 기능의 부재, OTP 배포 비용 발생으로 공인인증서의 대체능력 부족 등의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또한 그동안 고집해왔던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새로운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기존의 보안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



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donghlee@korea.ac.kr

이달의 이슈

금융보안, 이대로 좋은가 | 전문가 설문조사

금융보안, 경영자 인식 제고 '급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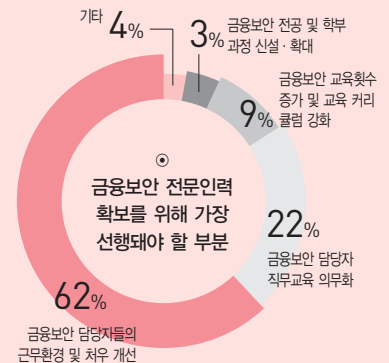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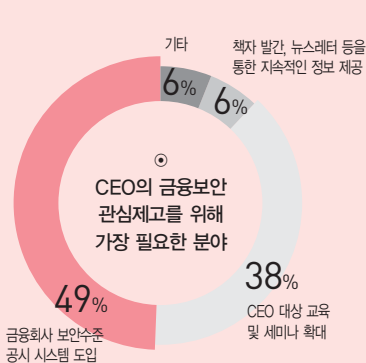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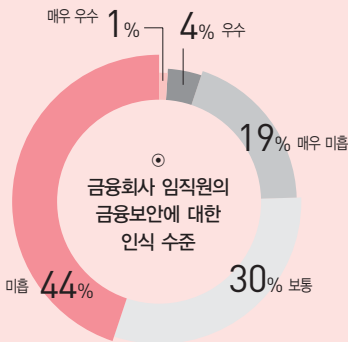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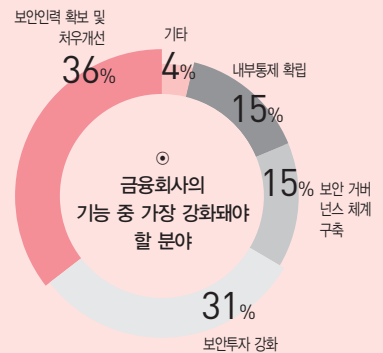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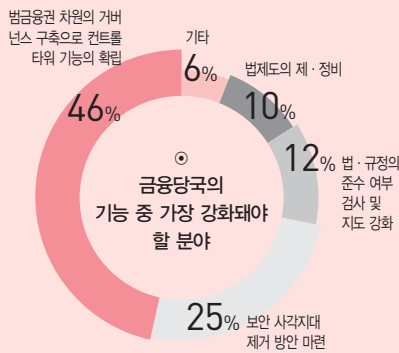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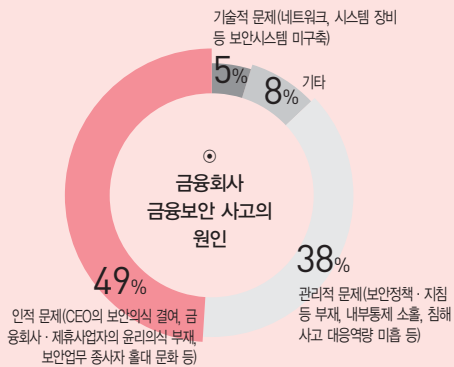
금융보안연구원은 금융보안 사고대책 및 보안수준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지난 5월 19일부터 4일간 학계 및 IT보안 산업계 등 총 108명의 보안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응답자 비율: 금융회사(52%), 산업계(36%), 학계(3%), 기타(9%)
- 담당업무: 운영관리(53%), 연구개발(25%), 기술지원(7%), 기타(15%)
- 담당기간: 10년 이상(41%), 1~3년(27%), 5~10년(21%), 3~5년(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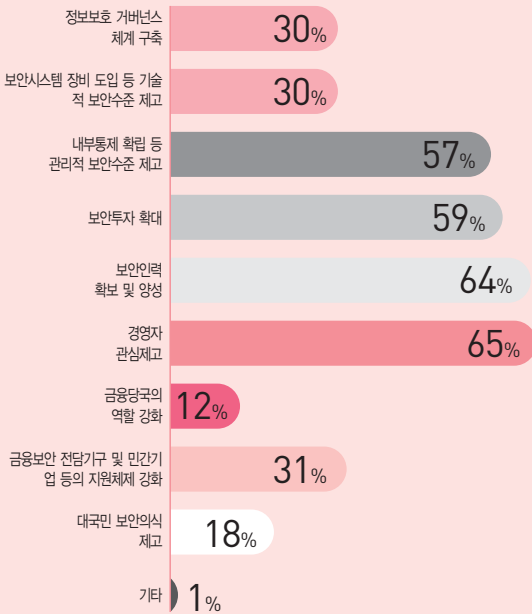
아래 내용은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금융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보안사고 원인, 인적 문제를 1순위로 지적

먼저 최근 발생한 금융보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묻자 각계 전문가들은 '인적 문제', '관리적 문제', '기술적 문제' 순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 응답자의



◎ 금융보안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복수응답)



49%는 CEO의 보안의식 결여, 금융회사·제휴사업자의 윤리의식 부재, 보안업무 종사자의 휴대 문화 등의 인적 문제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응답자의 38%가 보안정책 및 지침의 부재, 내부통제 소홀, 침해사고 대응역량 미흡과 관련된 관리적 문제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했다. 보안시스템 미구축 등 기술적 문제를 답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기술적 보안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보통 이상' 우수한 수준이라고 답한 반면, 관리적 보안수준 및 인적 보안수준은 '미흡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대부분으로 관리적, 인적 보안수준 제고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향후 금융보안 기능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각계 보안 전문가들은 경영자 관심 제고(65%), 보안인력 확보 및 양성(64%), 보안투자 확대(59%), 내부통제 확립(57%)을 우선적으로 꼽아 인적, 관리적 보안수준 제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그 밖에도 보안시스템 장비 도입 등 기술적 보안수준 제고(30%),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30%)과 금융보안 전담기구 및 민간기업 등의 지원체제 강화(31%)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복수응답).

또 금융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의 기능 강화

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유관기관 중 특히 금융보안 전담기구(47%)와 금융회사(34%)에 대한 기능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해 금융보안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역할 및 기능 제고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각 기관별로 강화해야 할 분야로 금융당국은 '범금융권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확립(46%)'이, 금융회사는 '보안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36%)'과 '보안투자 강화(31%)'가, 금융보안 전담기구는 '금융회사 침해사고 대응 지원 강화(5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1금융권에 비해 금융보안 환경이 다소 미흡한 제2금융권의 경우 보안강화를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자체 정보보호 투자 확충(47%)의 필요성과 함께 금융보안 전담기구 지원 방안(24%)과 은행, 증권, ISAC(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정보공유분석센터)와 유사한 통합모니터링체계 구축(22%)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와 처우개선 중요해

아무리 뛰어난 보안솔루션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 이용자의 보안인식 및 수준이 부족하면 보안상 구멍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계 전문가들은 누구보다 경영진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보안수준 공시 시스템 도입(49%)과 CEO대상 교육 및 세미나 확대(3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일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범국민 금융정보보호 캠페인(85%) 등을 통한 대국민 보안의식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금융보안은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보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해야 하는 특수한 분야임에도 많은 보안 인력들이 보안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등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금융보안 기능을 제고하고 내부 직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업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62%)과 금융보안 담당자 직무교육 의무화(22%)를 통해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와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내부통제

민관 합동 TF 통해 근본적 금융보안 대책 마련할 것

지난 4월 연이어 발생한 현대캐피탈의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 사건, 농협이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한 업무마비 사건으로 인해 금융 분야 IT보안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추락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IT보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IT보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촉발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고객의 자금거래라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회사의 IT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대책들이 필요할까. 이러한 보안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각계 각층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사고들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IT보안의 기본절차 무시, 엄청난 사고로 이어져

언론의 검찰 수사결과 보도내용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사건의 경우, 해커 등이 공모해 지난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서울과 필리핀 등지에서 현대캐피탈의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객정보를 해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의 경우,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노트북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좀비PC가 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후 이 노트북의 각종 정보를 빼내 분석한 결과 은행 전산시스템 관리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7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지난달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해킹방법이 고도의 해킹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많이 알려진 기법으로 해킹방지대책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의 경우에도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노트북에 대한 반출 및 반입 통제가 소홀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IT보안의 기본적인 절차들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해킹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해킹상황에 대응



김향식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8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을 원격조정에 문자 폭탄을 보내도록 하는 해킹 시연을 보고 있다.

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2009년 ‘7.7 디도스’ 사건이 발생한 후 ‘금융회사 디도스 공격대응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들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명하도록 권고하고, IT 예산 및 인력 중 IT보안 관련 예산 및 인력의 비중을 5% 이상 확보하게 하는 등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지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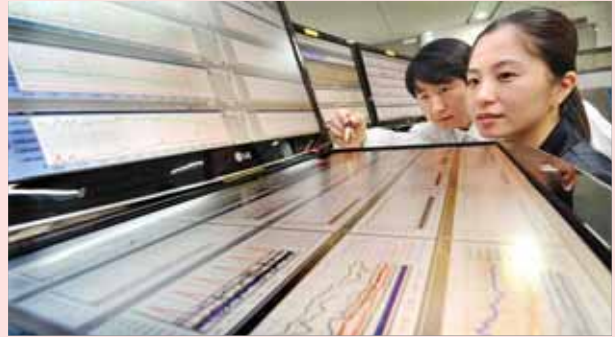
현대캐피탈과 농협이 IT보안사고를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 IT보안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융 IT보안사고의 재발 방지 및 체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의 IT보안 분야 최고전문가가 대거 참여한 ‘금융회사 IT보안 강화 TF’를 지난 4월 구성했다.

TF에서는 금융회사 IT보안 실태를 정밀 점검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이용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IT보안실태에 대한 서면점검, 현대캐피탈 및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정부관계기관, 금융감독당국, 금융회사 유관기관, 민간 IT업체의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구성해 금융회사 IT보안 부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원인 및 IT보안 실태를 파악해 금융회사 IT보안 강화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보안실태 점검 및 감독 강화 추진

금융회사의 IT보안은 일시적인 관심이나 대책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할 사항이다. IT보안은 어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문제로서 단발성 관심이나 대책으로 끝난다면 앞으로도 IT보안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IT보안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노력과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IT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IT보안 관련 법규 및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들이 IT보안 관련 법규들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는 한편 IT보안의 중요성 및 보안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라경제



최근의 금융보안 사고를 계기로 은행, 카드, 캐피탈 등 모든 금융권이 특별 보안점검에 나섰다. (사진) 지난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침해사고대응팀원들이 실시간 보안 관제체제로 보안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Tip 인터넷 금융거래,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출처: 안철수연구소

- 1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스캔해서 사진파일이나 엑셀파일 형태로 개인 이메일 계정 또는 인터넷하드에 저장하지 않는다.
- 2 가급적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나 외장하드 등 이동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인터넷뱅킹 사용 시에만 PC에 연결해 사용한다.
- 3 보안카드보다 OTP(One Time Password)나 MOTP(Mobile One Time Password) 등을 사용한다.
- 4 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이나 포털 메일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및 관리한다.
- 5 인터넷 금융거래 계정 ID와 비밀번호는 포털 메일계정 ID·비밀번호와 다르게 사용하고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 6 PC방 등 공공장소에서는 인터넷뱅킹 사용은 물론 각종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지 않는다.
- 7 MS 윈도우 보안패치 및 백신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백신 업데이트를 해 늘 최신으로 유지한다.
- 8 업데이트한 백신으로 실시간 검사를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수동 검사를 한다.
- 9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SMS)서비스를 이용한다.



권한용
금융감독원 IT감독국 부국장
khy6815@naver.com

“사람에 의한 보안관리가 핵심”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

인터넷, 전화와 같은 정보매체에 연결돼 있는 이상 우리는 늘 범죄에 노출돼 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불안에 떨 수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살 수만도 없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은 지난 12년 간 각종 사이버범죄를 해결한 국내 최고 전문가다. 그에게 최근 범죄 유형과 보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해킹, 디도스, 인터넷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가 있지만, 최근엔 많은 이들의 눈이 금융 분야에 쏠려 있다. 이 부분부터 얘길 시작해야겠다.

최근 금융 분야의 사이버범죄 수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예전부터 사고는 있어 왔다. 2004년 외환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5천만원을 이체한 사건을 시작으로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생겼다. 그러다 2008년 이후엔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해 봄 제2금융기관인 7개 저축은행이 미국인 해커에 의해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고가 있었다. 제1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은 이번 농협 사태가 처음이다.

금융보안 사고는 대개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

금융은 크게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이렇게 나뉘는데 국민과 가장 가까운 은행과 카드 분야의 범죄가 일반적이다. 카드사고는 2006년부터 등장했다. 타인의 카드번호와 뒷면 세 자리만 알면 얼마든지 복제카드를 만들 수 있다. 2008년엔 카드정보를 다량 소유하고 있는 가맹점들이 타깃이 됐다. 결제 이후 사라져야 할 카드정보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를 통해 10만개의 카드정보가 루마니아 해커에게 빠져나간 것을 밝혀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에 전파, 해당 사용자 카드를 재발급하게 했다. 그중 국내에



재반입된 정보도 있었는데, 한 건에 30만원씩 거래되고 있었다. 국제공조를 통해 범인 검거는 물론 국내 복제카드 제조책과 유통책까지 일망타진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금융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과거와 달라진 특징이 있다면?

사이버범죄의 1차 목적은 경제적 이득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해커비즘’(hacktivism)이라고 해서 정치적·사회적 목적만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또 예전엔 범행대상이 개인 차원이었지만 이젠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 전에는 해커 개인의 실력으로 범행을 저질렀

지만 최근엔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수개월 동안 하나의 목적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어떤 시점에 터뜨리는 것이다.

최근 금융보안 사고와 관련해 '사람에 의한 보안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기사를 봤다. 어떤 의미인가?

보안은 물리적 보안,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으로 나뉘는 게 보통이다. 이 중 물리적 보안은 IT자원이 있는 곳에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거나 정보의 반입·반출이 안 되게 하는 것이다. 요즘 회자되는 내부통제가 이것이다. 시스템 권한이 있더라도 부정하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그 행위를 독립된 감시부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범죄가 이 물리적 보안의 허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보안장비를 충분히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적 보안지식과 경험을 갖춘 보안전문가를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장비가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번 일로 보안과 보안예산의 중요성이 부각된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보안이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버린 돈으로 치부한다. 오너가 IT 분야를 수익창출의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봐주면 좋겠다. 보안사고는 발생하면 복구가 안 된다.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일례로 옥션의 경우 정보 유출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데 배상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 1,860만명의 회원들이 배상을 청구하면 도산할 수도 있다. 보안은 큰 위험요소다. 하지만 보안의식이 있는 관리자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면 상당수 위험요소가 커버될 수 있다.

수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아무리 완벽하게 막는다 해도 100% 보안이란 어려운 일이다. 안터잡게도 항상 창이 방패보다 앞서는 것 같다. 특히 수사 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증거분석의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 컴퓨터와 늘 씨름해야 한다. 디지털증거들은 위·변조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복원하거나 해독하기가 쉽지 않다. 또 IP주소도 경유하거나 세탁할 수 있어서 대부분 실제와 다르다. 게다가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런데 국제공조를 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증거가 없어지거나 범인이 도주할 우려도

있다. 때문에 다른 나라의 우호적 협조를 얻기 위해선 정보 공유, 컨택포인트 유지를 평소에도 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이버테러 수사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우리는 '디지털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표방한다(웃음). 사실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기회는 별로 없다. 그런데 최근 구글 스트리트뷰(실사 웹지도서비스) 사건이 좋은 계기가 됐다. 전 세계 16개국에서 구글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범죄증거를 확보해 형사입건했다. 구글의 2중 암호화 체계를 뚫어 어떤 정보가 은밀히 수집되고 있는지 규명했다. 주요 외신에서 크게 주목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뿌듯한 사건이었다.

우리 수사관들의 실력이나 자질이 매우 중요하겠다.

가장 좋은 범죄수사의 교과서는 사건이다. 가장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교육이라고 해도 사실 1, 2년 전 정보가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과 떨어져서 안 된다. 팀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또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공유해 간접경험을 체험하게 한다. 국내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특성과 교육도 병행하고, 해외 교육기관에 보내 포렌식기술을 습득하게도 한다.

사이버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는 없을까?

해킹이라는 것이 한 번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해킹 시행착오 과정에서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부분 해킹시도를 당한 기업이 되레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질까봐 덮어버린다. 해킹은 시도만 해도 범죄다.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취재를 하면서 이용자들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안수칙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동영상을 다운받는 것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안 업데이트, 키보드 업데이트, 백신 업데이트 등도 주기적으로 따르는 게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악성코드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백신은 이미 알려진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능력만 있기 때문에 신종 악성코드를 탐지하려면 별도 보안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또 무료로 보급되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나란 경제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보안을 확대하는 문화부터 바뀌어야



지난 4월 26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전자신문과 금융보안포럼 공동 주최로 '금융보안 현황 및 대책 방향' 좌담회가 열렸다. 금융보안포럼은 금융IT 보안 정보교류와 기술,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 7월 7일 출범했으며, 민·관·산·학·연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 근 금융 부문에서 발생한 여러 해킹사고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금융보안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금융거래 이용자들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금융서비스 전반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금융보안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 및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인터넷뱅킹 이용 금액은 일평균 기준 29조6,886억원으로 전체 금융거래 중 전자금융 이용 비중이 80%를 훨씬 상회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비대면거래, 즉 전자금융거래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이용한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이용건수와 금액은 일평균 95만건, 468억원 규모에 이르는 등 전자금융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금융경제를 순환시키는 유희유 역할을 하고 있다.

C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중심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해야

그러나 전자금융 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편리한 순간의 이면에는 이를 위협하는 해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금전적 이득을 노린 개인정보 탈취

목적의 사이버 침해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금융정보 유출은 예금 불법인출 및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의 주요 위험요소가 됐다. 무엇보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은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나아가 국가 사이버 안보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동안 금융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방식은 사고가 터질 때만 반짝 관심을 기울이고 일부 기술 도입에만 그치는 단편적인 문제해결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보안 사고에 이어 급기야 금융전산망 마비라는 사상 초유의 금융 사고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금융 IT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CSO(Chief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이행이 시급하다.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예산과 인력 운영의 독립성을 가지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SO)를 임명해 기업이 추구하는 기본 목표에 따라서 영업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다양한 주요 정보를 책임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따라서 보안조직 및 기능의 독립성 보장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독립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CSO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솔루션 및 시스템 도입처럼 일시적·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조치뿐만 아니라, 독립적 보안조직의 성립과 독립된 CSO 임명 그리고 CSO를 정점으로 한 기업보안 거버넌스의 확립을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라면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수사항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금융보안 전담기구의 역할 강화 필요

다음으로, 경영자의 금융보안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IT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보안위협 또한 융·복합화되고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100% 완벽한 보안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대책 수립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융회사들이 아직까지도 '금융보안'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력 및 예산 등의 부분에서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은 IT인

력 대비 평균 2.9%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며,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보보호 인력육성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보안을 홀대하는 문화를 바꾸고 보안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시에 내부 보안인력의 전문교육과 직업소명 및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보안'은 지속 가능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경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보안 위험 및 금융 부문의 사이버테러 대응의 효과를 높이고 금융보안 업무의 산재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막기 위해 금융보안 전담기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망에 대한 공격이 더욱 지능화되고 제로 데이 공격(Zero Day Attack,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기술적 위협으로 취약점 공격이라고도 함)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보안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구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금융결제원, 증권권에서는 코스콤 등이 전담해 디도스(DDoS) 및 해킹 공격 등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제2금융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데다 금융보안기관의 지원범위에서도 배제돼 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금융ISAC(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와 같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금융보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모두 금융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일회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진정한 금융IT 강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래경제



곽창규
금융보안연구원장
kwagchan@daum.net

쉽고 자세한 개념 설명 최신 사례와 통계

경제 학습 쇼

개념 · 사례 · 통계를 활용한



중학교 사회 편

-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포함된 경제 개념을 교과서 편제에 맞게 구성
- 16개의 경제 개념을 개념 설명, 사례 및 통계, 실력테스트로 구성

고등학교 사회 편

- 2011년 개정된 사회 교과서에 포함된 경제 개념을 교과서 편제에 맞게 구성
- 10개의 경제 개념을 개념 설명, 사례 및 통계로 구성

고등학교 경제 편

-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포함된 경제 개념을 교과서 편제에 맞게 구성
- 52개 경제 개념을 개념 설명, dangerous point, 사례 및 통계, 실력테스트로 구성
- 최근 3개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수록

「개념·사례·통계를 활용한 **경제 학습 쇼**」은 "**click**" 경제교육 홈페이지(<http://click.kdi.re.kr>)에서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발간된 도서는 홈페이지로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권당 3,000원, 사회과 교사는 무료로 신청 가능).

녹색인증제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 시행 1년을 맞았다. 녹색인증은 정부가 해당 기술이나 사업이 유망한지를 가려 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인증의 종류는 3가지로, ‘기술’에 대한 인증, ‘사업’에 대한 인증, ‘전문기업’에 대한 인증으로 나뉘어 있다. 녹색인증제의 시행 배경, 진행상황, 기업의 반응 등을 『나라경제』가 취재했다.



녹색인증으로 녹색성장 옥석 가린다

최 근 수년간 우리 사회에 거세게 불고 있는 녹색 바람이 녹색인증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녹색인증은 정부가 해당 기술이나 사업이 유망한지를 가려 인증을 부여하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인증받은 기업에 직접 혜택을 주지 않고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녹색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해 70점 이상이 되면 녹색인증심의위원회에 추천된다. 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 및 전담기관, 평가기관의 해당 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 등 15인 내외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평가를 통해 최종 인증이 확정된다.

둘째, 녹색사업(프로젝트)이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9개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플랜트, 첨단수자원 개발,

물론 인증받은 기업에게도 혜택이 있다. 인증기술을 사업화할 때 필요한 정책자금, R&D, 마케팅, 기술인력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시설용자사업 우대, 기술보증 우대, R&D 신청 시 가점, 특허 우선심사, 공공구매 우대, 해외전시회 참여 우선권 등이 적용된다. 녹색인증제는 지식경제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맞춰 함께 시작됐다.

녹색인증 대상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녹색기술이다. 무조건 ‘녹색’이나 ‘환경’의 명칭이 기술에 포함됐다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녹색기술 인증은 정부가 정한 10대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에 속한 85개 중점 분야의 기술이 그 대상이다.

이 기술에 대한 1차 평가는 정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너지기술평가원·기술보증기금 등 9개)에서 이뤄진다. 정량적 기술 수준을 충족하고 기술우수성(60점), 녹색성(40점)의 2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그린IT, 녹색교통, 첨단그린주택, 청정생산, 친환경안전농식품, 환경보호의 105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녹색기술 활용성, 환경 기대효과, 사업타당성의 기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녹색전문기업이다. 창업 후 1년이 경과됐고,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의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 되면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녹색인증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이뤄진다.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신청서식을 제출하면, 전담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이 관련 서류를 보완해 9개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신청접수 후 45일 이내에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다. 발급명칭은 기술·사업 분야별 소관부처 장관이며,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 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5월 16일 기준으로 녹색기술의 경우 730건이 신청됐으며, 최종 인증이 확정된 기술은 302건이다. 녹색사업은 9건, 녹색전문기업은 30개사가 인증받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녹색인증 신청이 양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를 통해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고 말한다. 엄격한 사후관리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나라경제

“녹색금융과의 연계고리 강화할 것”

권기성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사무관

녹색인증제가 추진된 배경은?

녹색성장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 녹색벤처기업은 2009년 1,785개사로 전체의 9.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국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R&D 투자율이 낮은 수준이어서 녹색기술 혁신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다.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나?

연 20억원 규모로, 주로 녹색인증제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홍보, 교육, 지표조사 등에 사용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술인증에 필요한 시험검사비용의 일부(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3억원 정도된다.

기업들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지난해 말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친환경기업 이미지 제고(21%)가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고, 정책자금 지원(20%), 공공구매 우대(10.9%), 기술보증 우대(9.6%), 금융권 대출(8.2%)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투자 활성화와 녹색 ‘인증’에 있어 ‘격려와 선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했다.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평가내용 및 수수료 등을 최소한으로 했다. 반면 과거 벤처버블과 같은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녹색인증의 기준 설정과 운영을 엄격히 해 자본시장의 왜곡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최고기술 대비 약 70% 수준의 정량적 기술수준을 설정했고, 2단계 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제도 시행 1년이 지났다. 시행 후 현장의 피드백을 받아 변경



된 사항이 있다면?

인증대상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 작업을 위해 지난 5월 17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10대 분야 61개 중점 분야의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24개 중점 분야를 추가했다. 도입기 기술 등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수준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고, 녹색사업 인증대상으

로 기존 녹색프로젝트 외에 기업의 녹색설비투자를 포함하는 등 산업계 니즈를 반영해 녹색산업과 관련한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녹색인증 평가와 관련해선 기존의 기술시장성 평가 등 금융권의 여신심사와 중복 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줄였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녹색인증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녹색금융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권의 전용 시스템 개발·보급 등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내외 투자사를 대상으로 녹색인증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연계고리 강화에 보다 주력할 계획이다. 녹색인증제는 정부, 기업, 소비자(투자자), 금융권의 공동된 인식과 협업이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다. 녹색인증제의 벤치마크 대상이 된 네덜란드의 ‘Green Funds Scheme’(1995년) 역시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됐다. 녹색금융상품 출시, 녹색인증제품 활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인증수요자인 기업 및 자금공급자인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슬기롭게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남경미

녹색기술 인증 후 매출 수직상승

최홍복 (주)에코데이 대표

(주)에코데이는 고농도 폐수처리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10월 '단단 수직형 E.PFR-2 소화'를 이용한 메탄가스 생산기술'로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다. 이 기술은 음식물폐기물이나 가축분뇨와 같은 유기성폐기물을 메탄이 포함된 바이오가스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하나의 원통에 단을 나눠 미생물의 발효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최홍복 대표(51세)를 만나 인증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리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그래서 파격제안을 했다. 공사비를 우리가 지불하고 개선효과가 없으면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결과는 우리 편이었다. 같은 양의 음식물쓰레기에서 기존보다 3배나 많은 바이오가스가 발생했다. 이후 청주시·속초시와도 계약이 성사됐다. 또한 이 기술로 미국·일본·중국에서 특허를 받았고, 현재 유럽은 추진 중이다.

녹색인증제를 알게 된 배경 및 참여하게 된 계기는?

폐수를 처리하는 기업인 만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단순히 폐수만을 정화시켜서는 사업역량을 키워나가기 어렵다. 환경과 에너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바이오 기술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면 그 기술만 팔아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 판단했다. 우리 고객의 90%가 지방자치단체로 정부와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다.

인증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과 아쉬운 부분은?

인증기업에 간접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좋다. 직접 자금을 지원하면 더 이상 기술개발은 하지 않고 오남용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장기적 기업생태계 측면에서도 간접혜택이 더 바람직하다. 주기적 기술 재검증으로 기술의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제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경쟁 입찰에서 인증기술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한다. 이것만 실현된다면 기업들에게 자금지원보다 더 확실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인증받은 기술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나?

파주시에 인증기술이 처음 사용됐는데, 시설완공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파주시의 음식물처리시설은 10년 전 독일에서 들여온 시설이었는데, 당시 작동엔 문제가 없어 우

해외시장의 녹색기술 수준은 어떤가?

녹색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한 붐이다. 올해는 중국시장에 진출할 계획인데, 중국은 우리보다 전기 값이 3배나 비싸다. 바이오기술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성과가 기대된다. '유럽은 녹색기술에서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객관적 비교는 어렵다. 음식, 기후, 면적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을 위해선 R&D 투자 등 연구인력이 중요할 텐데 중소기업으로서 어려운 점은 없나?

내가 전공한 분야고, 기업 생존과 연결돼 있으니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는 재미도 쏠쏠하다.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후 매출이 10배 가까이 올랐다. 매출이 오른 만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다.

정책담당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인증을 받으려면 현장검사가 필수인데, 현장에 가지 않고도 모니터가 가능한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수처리시설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처리과정이 실시간 전송된다. 바이오기술에도 사용자에게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시간과 인건비를 줄이고 사후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리경제

안성경 나라경제 기자

참여기업 확대 위해 전방위적 홍보를

녹색인증제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시작돼 최근 25차례의 인증 심의를 실시했다. 아직 진입초기 단계인 만큼 양적 측면에서나 질적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말하기는 곤란하다.

녹색인증제가 진입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 성장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홍보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녹색산업의 영역 확대와 함께 운영요령을 필두로 정책적 보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고, 금융기관은 그에 따른 상품을 개발했다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과사용 제도와 상품에 머물 것이다.

녹색인증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녹색인증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75.7점으로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녹색인증제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 인증기업의 33.3%가 ‘지원체계 미흡’을, 비인증기업의 22.0%가 ‘인증기준 불명확’을 꼽았다는 점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녹색산업 관련 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인증기업 수는 333곳에 불과하다.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 금융권에서는 녹색기업 풀(pool)이 최소 1만개 정도는 있어야 국내 금융권에서 1조원가량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은 물론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하다. 21세기의 산업 트렌드에 비춰보면 홍보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단기간에 녹색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녹색인증제 실시 이후 지원 혜택 인지율은 56.9%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녹색사업 대상 기관에 녹색인증제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혜택 지원을 위한 신



‘녹색인증 활성화 제도개선방안’ 공청회가 지난 3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청절차와 방법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또한 인증 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지표 개선, 심사의 다양성 확보, 평가 전담기관들 간 정보 네트워크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신청기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녹색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45일이다. 하지만 녹색기술로 인증받은 후에도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로 전환하려면 다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심사받도록 돼 있다. 때문에 자금이 급한 기업에게는 녹색인증제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과거 IT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벤처기업 인증과 같은 제도를 개발해 전폭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녹색인증제 역시 홍보 전략의 개발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녹색산업이 국가 전체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리경제



김재하
녹색인증 평가위원
서울예술대 디지털아트학과 교수
jhkims@seoularts.ac.kr

*2011년 『나라경제』는 연중기획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를 찾아간다.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기업의 형태이며, 이들을 이끄는 사회적기업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 새로운 CEO다. 이들이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한 이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 조명해본다.

사회적기업 규모 키우려면 금융이 핵심

장지연 SOPOONG(소셜벤처 인큐베이팅·투자회사) 대표

사회적기업 창업의 핵심이 아이디어라면, 사회적기업이 하나의 사업체로 자리를 잡는 데엔 금융이 핵심이다. 그간 만나온 사회적 기업가들 역시 입을 모아 금융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는 올해 지자체를 통해 509억원을 사업개발비와 인건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

다. 또 경영컨설팅 지원, 우선구매 촉진 등을 병행해 자립할 기반을 만드는 한편 금융·세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듯 2006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각종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이 비교적 수월해졌다고는 하나 자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융환경이 조성됐는지는 의문이다. 소셜벤처 인큐베이팅·투자회사 'SOPOONG'의 장지연 대표는 '진행형'이라고 답했다. "제도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이 이뤄지면서 동시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식이나 문화가 만들어져 확산되는 중이다. 민간의 자발적 에너지들이 접목돼 영역을 키우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장지연 SOPOONG 대표

벤처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투자회사 설립으로 이어져

2008년 설립된 SOPOONG는 당면한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당시엔 소셜벤처에 대한 국내 토양이 없었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자산을 기여해보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했을 뿐, 본격적인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09년부터다.

장지연 대표가 설명한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는 네 단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아이디어 개발, 사업모델과 계획 수립을 통한 아이디어 검증, 제품 런칭과 상업화를 통한 시장진입, 자원투입을 통한 규모 확대 순이다. SOPOONG는 아이디어 검증 단계부터 함께해 시장진입을 위한 금융지원을 돕는다. 인큐베이팅은 창업자금 투자에서부터 간주한다. 장 대표는 "투자 전부터 관계 맺기를 통해 지원하지만

우리가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 들어간 때부터를 정식 투자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규모는 사업별로 다르지만 평균 3천만원 내외로 정했다. 투자기준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영역에서 5년 안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사업을 수행할 핵심적인 맨파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심사대상도 많아졌을까. 장 대표는 “심사라기보다 찾아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주요 행사에 가면 적극적인 플레이어들은 계속 나타난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다 보면 그들이 팀을 꾸리고 사업모델을 만들어 온다. 빠른 사람은 6~8개월, 길게는 2년 걸리는 팀도 있더라.” 분기별로 서너 팀 이상 함께 창업을 준비한다는 그녀.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 투자가 이뤄진 곳은 ‘오르그닷’(친환경 소재를 이용하는 패션 디자인전문업체) 한 곳뿐이란단다. 대체 왜?

장 대표는 초기 의도와 달리 너무 빨리 달라진 사회환경을 언급했다. “2009년 이후 사회적기업이 크게 늘고 소셜벤처경연대회 같은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우리의 소규모 투자가 실효성이 있을까 되짚어 보게 됐다. 앞으로의 포지션과 투자방향을 고민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사회적기업의 창업재원은 상금, 정부 지원금, 비영리기관의 사업개발비, 대출 또는 자기자본 등의 형태로 3~5천만원 정도인 경우가 많다. 마음만 먹으면 초기 진입엔 비교적 여러 기회가 생긴 셈이다. 그러나 이 다음 단계의 금융을 생각하는 SOFOONG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우리에게 알려진 1세대 사회적기업들은 이미 이 비용들을 증복해서 조달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그중엔 다행히 빨리 수익을 얻고 성장세인 곳도 있지만 2~3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곳도 있게 마련이다. 시장에서 인지도도 얻고 생산력도 키웠는데 초기 자금지원 단계가 끝나버리면 당장 운전자금 확보부터 가로막힌다. 재무구조상 부채비율이 높으니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형태의 조달도 어렵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더 큰 금융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이 공백이다.”

그녀는 운전자금으로는 2억원, 사업확장을 위해서는 통상 10억에서 20억원 정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운용하면 적절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일단 시장에서 검증이

되면 대기업 등 직접 투자자를 찾기도 한결 쉬워진다고 했다. 소규모 투자자들을 조직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사회적 가치를 함께 키우고 확산시키며 만족

지난 3년간 SOFOONG는 수익을 낸 적이 없다. “애초부터 향후 5년간 수익은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 인큐베이팅의 역할은 작은 회사의 가치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다. 혼자 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도 만족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다른 투자자가 들어오면 배당형태든 지분매입이든 보상을 받게 되는 건데 아직 5년이 되지도 않았고 투자를 많이 하지도 못했다.” 현재 SOFOONG는 창업자들의 펀딩으로 운영된다. 수익도 없는 곳에 자금을 대는 걸 신기하게 여기자 장 대표는 “1990년대 후반 벤처붐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꾸준히 벤처생태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 네트워크를 통해 인큐베이터 역할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더라. 고무적인 것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올 6월부터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교육 부문과 마찬가지로 직접 하지 않고 위탁하는 형식인데 우리도 ‘함께하는 재단’ 등 몇몇 곳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의 출현과 궤도를 함께 해온 SOFOONG. 장 대표는 정부가 민간의 자발성을 좀 더 인정하고, 이들의 활약을 성과로 인식해줬으면 하고 바란다. 사회적기업 환경 조성에만 급급해 민간의 요구에 소홀해선 안 된다는 것. 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역량을 견뎌내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회를 잡게 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이 영역의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느 순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게 되더라’는 말을 한다. 우리 안에 지적 자산이 부족하다는 뜻 같다. 기업 활동은 지식과 인력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만큼 우리가 지적, 인적 교류가 이뤄지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한다.” 그녀와의 인터뷰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험문제를 푸는 기분이다.

“사회적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야 그 가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 확보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려면 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장지연 대표.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고민하기에 SOFOONG의 성장통도 진행형인 듯하다. 나라경제

시장 · 민간 부문 통한 재원조달 활성화돼야

사회적기업은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라는 차원에서 현대 복지모델의 대표적 사례다. 국가의 전통과 이념에 따라 시장지향성을 강하게 갖거나 또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원조달 방식이 있지만, 어느 경우든 국가의 복지재정이 절감되고 사회서비스는 확대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창출이 기존의 저임금 구조로만 이뤄져선 빈곤해결이나 고용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돼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시장화를 성취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임금이 제공돼야 고용창출을 통한 빈곤을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재원마련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제3섹터 부문은 전통적으로 정부와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및 창업을 준비할 때 공공재원 이외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기업이나 민간기관을 통한 재원조달이 활성화돼야 한다. 나아가 공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방식,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및 공조방식 등 다양한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투자자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사회복지체제나 정부지원 형태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방식이 달랐다. 유럽 각국은 1990년대부터 경기불황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히 이탈리아와 영국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 사회적기업을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왔다. 이와 달리 미국은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삭감으로 비영리조직들이 재정난에 봉착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영리활동을 시작하면서 사회적기업이 등장했다.

각 사회마다 정부 재정지원 비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재정구조는 유사하다. 설립 초기엔 정부의 보조금이나 서비스계약을 통한 지원이 재정적 원천의 주를 이루다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자생력을 얻어 정부의 보조금을 대출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점차 정부 의존방식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노동통합이라는 목표로 진행된 초기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전문적 기업의 형태로 전환·진화하는 것이다.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정부 공공 부문 서비스 수행에서 시장 부문으로 확대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설립 초기에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해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토양을 마련한 만큼 향후 그 영향력을 축소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영역과 민간영역으로 지원체계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

물론 모든 사회적기업이 시장수입에 의존해서 자립할 수는 없다. 일부 사회적기업은 시장수입 이외에도 정부지원, 모법인의 지원, 연계된 기업의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 개인의 기부행위 등에 의존한다.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 등을 통한 무담보 소액대출제도, 복권기금과 같은 각종 공익기금의 활용, 중소기업진흥청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휴면금융 활용 등 다양한 방안들도 결합돼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정무성

송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program24@hanmail.net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로버트 라이시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앞으로 미국이 겪을 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기업은 갈수록 부유해지지만 개인은 갈수록 가난해지는 데 있다고 한다. 경제성장의 몫을 상위계층이 대부분 가져가는 바람에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만일 중산층이 더 가져간다면 총소비는 더 커질 것이고 그들이 심각한 빛의 늪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더 이상 소비할 게 없는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소비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새로운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가져올 결과는 어떤 것일까? 과거에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부가 축적되고 신분이 상승되는 일은 멀어져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상류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증오가 쌓이게 된다. '나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보다 '그들을 끌어내리고 싶다'는 욕망이 커질 때 엄청난 정치 사회적 혼란이 온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농부가 부잣집 옆에 살고 있었다. 부자에게는 암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가난한 농부로서는 평생 일해도 갖지 못할 값나가는 가축이었다. 농부는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마침내 하느님이 농부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옆집 암소를 죽여주세요." 사회심리학은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데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상은 미국 사람이 쓴 미국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아니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른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각 분야의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거기에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비리와 현란한 처세술이 한몫을 더하고 있다. 얼마 전 치러진 재보선에서 여당의 참패는 바로 서민의 경제난과 재벌의 횡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다. 서민들은 물가고와 전셋값 상승으로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는 데 반해, 삼성·현대 등 재벌들은 매년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경영이나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어떤 대기업의 경우는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낮춰야 임원들이 돈을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아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쥐어짤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거래조건을 강요받고 있어 불만과 고통이 극에 달해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재보선에 출마한 인사가 단기간에 보여준 원칙과 소신의 변화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지방 상호저축은행의 부도를 미리 알고 거액의 예금을 빼간간 예금주들의 행태는 무엇이며 미처 대처하지 못한 고액 예금에 대해서까지 소급해 예금보장을 해주자고 한 지역구 의원들의 처사는 어떻게 봐야 하나? 그렇지 않아도 심사가 뒤틀려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너무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차제에 더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 다시 말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진정으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사람들의 몫을 갉아먹지 않는지, 하다못해 비위를 건드리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지 한 번 더 살펴보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원망하는 많은 사람들에 포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자. 지금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미국이 직면한 진정한 위기이며, 그것 때문에 새로운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회장
yilee2020@hanmail.net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 재무부 증권국장,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교육부 차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후 2009년 세계미래포럼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저·역서로는 「시민을 위한 경제이야기」, 「미래와 세상」, 「미래진단법」 등이 있다.

초과이익공유제, 무엇을 들여다보아야 하나?

초과이익공유제(超過利益共有制)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주장으로 등장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시장경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저명한 경제학자 중 하나인 정운찬 전 서울대 교수의 주장이어서 그 논란은 더욱 뜨거웠다.

초과이익공유제, 그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해마다 목표 이익치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 초과이익의 일부를 나눠 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성장이다. 그 방법으로 대기업에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공유가 잘 이뤄지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을 줘 다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우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시장경제는 초과이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업들이 초과이익을 좇아 진입한다. 신규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은 기존 기업의 초과이익을 감소시켜 결국 없어지게 한다. 하지만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도 존재하는데 '시장실패'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시장지배력의 존재와 도덕적 해이, 역선택으로 대표되는 정보 격차 등이 시장실패의 대표 사례들이다. 경쟁을 통해 사라지는 초과이익을 별도의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해결하지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를 시장실패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시각에 동의한다면 실패한 시장경제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시장경제와 시장실패의 극복

시장이 실패하는 많은 경우에도 시장은 시행착오를 거쳐

자연스럽게 발전해 시장실패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상거래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이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였던 존 맥밀런의 「시장의 탄생」에 나오는 다이아몬드 시장의 사례를 보자.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정보 격차가 존재하면 시장은 실패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 시장도 그중 하나다. 판매자는 다이아몬드의 품질을 알지만 구매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판매자는 이 정보를 이용해 품질보다 비싼 값을 받으려 할 수 있고 이를 짐작한 구매자는 다이아몬드 구매를 망설이게 된다. 전형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다이아몬드 시장 중 하나인 뉴욕의 다이아몬드 딜러들은 계약서도 없이 구두 계약으로 수백만달러의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는다. 이런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소수의 거래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고, 한번 계약을 위반한 상인은 더 이상 다른 거래인들과 거래할 수 없는 구조로 해당 시장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시장은 스스로 실패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시장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에 규칙을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장실패의 상황을 극복하려면 정부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시장실패의 상황인 시장지배적 기업의 경우를 보자. 제약회사들이 성공을 기억할 수 없는 모험인 신약 개발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이유는 성공한다면 보장되는 특허권(시장지배력의 또 다른 이름)에 따른 높은 가격과 엄청난 이익 때문이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개발된 신약을 비싼 가격에 이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죽

“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업들이 초과이익을 쫓아 진입한다.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은 기존 기업의 초과이익을 감소시켜 결국 없어지게 한다. 하지만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도 존재하며 이를 ‘시장실패’라고 부른다. 경쟁을 통해 사라지는 초과이익을 별도의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해결하자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를 시장실패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

어가고 있다. 비인도적이라고 제약회사들을 비난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문제의 핵심은 모험인 신약 개발에 많은 자본을 투자한 기업들에게 이익을 보장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난한 환자들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다. 가난한 국가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복제 약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제약회사의 수입에는 별 타격이 없다. 어차피 대부분의 이익은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복제 약품이 선진국에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해 제약회사의 이윤을 보장하는 각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제약회사는 복제 약품을 허용하지 않거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면서 성공 가능성은 낮은 신약 개발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의 이익공유제

이익공유제는 노동시장에 현존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 제공되는 스톡옵션이나 PS(profit sharing)가 이익공유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면 시장은 실패할 수 있다. 노동자는 자신을 알지만, 구매자인 기업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판매자는 이 정보를 이용해 품질보다 비싼 임금을 받으려 할 수 있고, 이를 짐작한 구매자는 구매를 망설이게 된다. 전형적으로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과가 좋으면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스톡옵션이나 PS를 부여하는 제도가 노동시장에서는 일찍부터 도입됐다. 이를 통해 정보 격차에 의한 노동시장의 실패를 극복했던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 또는 우월한 협상력을 이용해 중소기업 몫을 빼앗아 간다는 시장실패의 시각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 시각이 틀렸다고 판단한다면, 초과이익공유제는 당연히 잘못된 제도다. 하지만 이 시각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다음과 같은 선택이 있다.

먼저 시장이 자연스럽게 발전해 시장실패를 극복할 것으로 믿고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해 중소기업들과 거래하게 돼 중소기업들의 몫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둘째, 시장의 자연스러운 발전은 너무 오래 걸려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즉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신약을 살 수 없는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시각에서는 점진적 개입과 급진적 개입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점진적 개입의 사례는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이고, 급진적 개입의 사례는 초과이익공유제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대기업이 우월한 협상력으로 중소기업의 몫을 빼앗아 가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나라경제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sangkim@ewha.ac.kr

“밥 맛 떨어지는 스마트폰 앱”

APP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만큼 불어난 뱃살에 대한 고민도 커졌다. 날씬한 몸매를 위해 헬스장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는 요즘, 평소 먹던 식단은 바꿔야 하나 고민스럽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 헬스장 가기도 쉽지 않다. 어렵게 등록한 헬스장도 자주 찾지 못하는 현실이다. ‘거금’을 들여 굳이 헬스장을 방문하지 않고 똑똑하게 다이어트를 할



자신의 운동거리, 시간, 속도 등 운동량과 효과를 측정할수 있는 '런키퍼' 앱(왼쪽) 아가자기한 카툰과 함께 매일 트레이너의 추천 운동과 식이요법을 알려주는 '다이어트 뽀티' 앱(오른쪽)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정답은 물론 스마트폰 속에 있다!

운동 마니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은 단연 '런키퍼'(RunKeeper)다. 해외에서 개발된 런키퍼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활용해 운동시간과 운동거리를 알려주는 앱이다. 별도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을 휴대하기만 하면 운동 보조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유사한 앱들이 다수 있지만 런키퍼에 대한 사용자들의 극찬이 쏟아지는 이유는 다양하고 정확한 기능 덕분이다. 런키퍼를 실행하면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운동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운동의 유형은 조깅과 걷기, 자전거 타기, 스키 등 13가지나 된다.

운동 유형을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운동시간, 이동거리, 소모된 칼로리, 속도 등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운동을 마치고 정지 버튼을 누르면 운동기록이 저장된다. 특히 이 기록은 런키퍼의 웹사이트로 자동 전송돼 자신의 운동 습관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맵과 연동돼 자신의 이동경로를 지도로 볼 수도 있다.

현재 런키퍼는 유료와 무료버전으로 출시됐다. 유료버전은 9.99달러, 꽤 비싼 편이다. 하지만 무료버전도 웬만한 기능을

다 지원하니 굳이 유료버전을 이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안드로이드폰뿐 아니라 아이폰, 윈도폰 등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지원하는 것도 장점이다.

다이어트 도우미가 필요하다면 '다이어트 뽀티'(Diet ppetit)를 내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혼자만의 의지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폰용으로 나온 다이어트 뽀티는 매일매일 새로운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 내용을 알려주는 앱이다. 사용자들은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1일차에는 국민체조 3회 이상 하기, 2일차에는 줄넘기 1천회, 3일차에는 윗몸일으키기 100회와 같은 방식이다. 발목과 허벅지 등 특정 부위의 살을 빼는 미션도 담겨 있다. 5월 현재 20일차의 미션이 게재돼 있다. 중간중간 다이어트 식단도 공개해 병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처럼 이미 출시돼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거나 최근 출시된 다이어트 앱 대부분은 사용자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기능을 담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언제든지 휴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손 안의 트레이너'인 셈이다. 지금까지 혼자 하는 운동이 재미없어서, 혹은 의지가 약해졌던 사람이라면 이들 '밥 맛 없어진' 앱을 이용해보자. 나눔



정현수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부 기자
gustn99@mt.co.kr

행복한 중소기업이란, 회사는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정열을 바치는 곳. 『나라경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행복한 중소기업'을 소개한다.

휴머니즘과 IT가 만나다

(주)후이즈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컨설팅 기업 후이즈(WHOIS)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난다. 말이 아닌 서로의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같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들. 눈빛만 봐도 통하는 팀워크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

패기와 열정 그리고 실력으로 똘똘 뭉친 20, 30대 젊은 IT인들이 일하고 있는 후이즈는 1999년 국내 최초 도메인 등록서비스를 시작으로 호스팅, 이메일 솔루션, 쇼핑몰 솔루션 등 인터넷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절대강자를 단언할 수 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대한민국 도메인·호스팅 1위 자리를 당당히 지키며, 인터넷 비즈니스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삼성·LG·SK·신한 등 국내 150여 유수기업에 전사적 도메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매출 200억원에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B2B 전문 비즈니스 기업으로서 'World Wide Marketing 포털사이트'를 지향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제작 지원, IT인프라가 필요한 곳을 찾아 IT기술 나눔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최근엔 '모바일 그룹웨어', '모바일 웹메일 서비스'를 선보여 기술력도 인정받았다. 한편 일본 현지 법인 '후이즈재팬'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사업역량도 갖춰 나가고 있다.

후이즈에선 직원들이 임원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유로운 복장, 야근 금지, 아이디어 공모 시스템 등은 새로운 기업문화의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있다. 이런 프리스타일 기업문화는 직원들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 기업성장의 발판이 된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50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복지카드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가을산행, 띠별 모임, 마니또, 동아리활동은 친밀감을 높여 주고 직원 간 소통의 장벽을 허물어 주며, '후이즈 한마음 체육대회'는 직원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 준다.

'휴머니즘'을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후이즈, 끈끈한 동료애와 따뜻한 기업을 지향한다. 회사는 자기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기에 주위를 둘러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성실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을 중시한다. 물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필수다. 도메인사업부, 시스템사업부 등 7개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며, 1년에 30여명 정도 신입·경력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인사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그네



요즘 윤리, 도덕 등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시청률에만 목매는 ‘막장드라마’가 심심찮게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어른들만 본다고 해도 문제가 적지 않은데 이걸 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서양미술의 역사에도 이런 막장 분위기가 한창 위세를 떨친 적이 있었다. 흔히 말하는 로코코 시대가 바로 그런 불명예의 주인공이다. 전통적으로 그림하면 신화적이거나 종교적인 주제, 혹은 아름다운 것, 영웅적인 것을 다뤄야 하는 게 불문율이었다. 하지만 로코코 시대엔 온갖 부도덕과 불륜이 버젓이 그림의 주제가 된, 그야말로 표현의 영역이 사라진 시대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18세기 초 루이 14세의 죽음과 함께 권력에 봉사하던 바로크 미술의 시대가 막을 내리자 그동안 태양왕의 위세에 눌려왔던 귀족들의 욕구가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다. 5세에 즉위한 루이 15세의 섭정이었던 오를레앙 공 필리프(Philippe d'Orleans)는 즉시 베르사유를 떠나 파리

의 툴리리 궁으로 왕의 거처를 옮겼다. 이때부터 파리 귀족들의 사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살롱문화가 꽃피게 되는데, 귀족들은 자신의 저택에 명사들을 초대해 토론을 즐기는 한편 그곳을 무대로 가벼운 사랑놀음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내밀한 즐거움에 탐닉하는 공간에 종전과 같은 바로크풍의 권위적인 장식은 어울리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저택 내부를 밝고 경쾌하게 꾸미고 감각적인 그림들로 치장했다. 이렇게 가볍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한 귀족들의 기호가 반영된 미술을 로코코 미술이라고 한다.

초기의 로코코 미술은 장 앙트완 바토(Jean Antoine Watteau)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아한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름의 품격을 지녔지만, 후기로 갈수록 감각적인 즐거움에 탐닉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이는 곧 그림의 주문자인 구귀족의 도덕적 타락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들의 경박한 기호에 영합한 화가들의 타락을 의미한다. 이런 그림을 그린 대표주자는 프랑수아 부셰(Francois Bucher,

1703~1770)와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Jean Honoré Fragonard, 1732~1806)로, 둘 다 귀족의 후원을 업고 화단을 지배했던 인물들이었다. 부세는 그리스 신화 속의 여신들을 옛날 얼굴과 농염한 육체로 묘사하거나 소녀 목동을 희롱하는 귀족을 즐겨 그렸다. 부세의 제자인 프라고나르는 한술 더 떠 불륜 현장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거나 저속한 에로티시즘에 탐닉했다. 그는 '불륜 전문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풍경화, 초상화, 종교화를 그리기도 했지만 그가 얻은 당대와 후대의 명성은 어디까지나 이런 '막장 주제'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네'는 그런 '막장 그림'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만하다. 그림을 보면 한 젊은 여인이 즐겁게 그네를 타고 있다. 그네를 밀고 당겨주는 사람은 나무 뒤편의 그늘 속에서 있는 남편이다. 그런데 그네를 타는 여인의 앞엔 나무 속에 살짝 몸을 가린 정부(情夫)가 그녀의 속곳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정부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인은 다리를 한껏 쳐들어 자신의 정부에게 친절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친절함의 도가 지나쳤던지 그만 신발이 벗겨져 큐피드 상을 향해 날아가고 있어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낸다. 큐피드 상은 여인과 정부 두 사람의 눈먼 사랑을 암시하는 무대장치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 좋은 남편은 자신의 행위가 부인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대견해하는 모습이다. 남편 옆에는 두 명의 아기천사 조각상이 있는데 이 불륜 현장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그나마 이 작품이 주제의 경박함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작가의 타고난 색채구사 능력과 능란한 붓질 덕분이다. 여기서 등장인물의 동적인 자세는 루벤스(Rubens)의 기법을 이은 것이고 숲에 보이는 어둠과 빛의 대비 효과는 렘브란트(Rembrandt)로부터 배운 것이다.

이 그림은 원래 호색한으로 유명했던 생 줄리앙(Saint Julien) 남작이 한 역사화가에게 주문했던 것으로, 주제의 저속함에 마음이 꺼림칙했던 화가가 그 제의를 완곡히 거절한 후 프라고나르를 추천했다고 한다. 남작은 프라고나르에게 남편 대신 주교를 그려 넣자고 주장했지만 화가가 남편으로 수정했다고 한다.

프라고나르의 주제는 불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한

젊은이가 아리따운 여인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하는 '도둑키스'라든가 긴장한 남성이 여인을 겁탈하려는 장면을 묘사한 '빗장'에서처럼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 내지는 성희롱까지 주제로 삼고 있다. 왕립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된 1765년 이후 그는 아예 에로티시즘 주제에만 몰두한다. 그의 그림에 만족

한 귀족들의 후원 덕분에 그는 큰돈을 만지게 됐지만 대신 경박한 로코코 화가라는 불명예스런 칭호를 감수해야 했다.

'막장 화가' 프라고나르의 말로는 비참했다. 프랑스 대혁명의 발발과 함께 구귀족들은 단두대에 오르거나 국외로 망명해 버려 대부분의 후원자를 잃은 데다가 새로운 시대는 더 이상의 막장 예술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졸지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한때 루브르 박물관에 일자리를 얻긴 했지만 이마저도 박탈당하고 만다. 1806년 눈을 감을 때 프라고나르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부도덕과 감각에의 탐닉에 대한 우분의 대가였다. 예술은 감각이 아닌 감정(곧 마음)에 호소해야 옳다. 요즘의 막장드라마가 되새겨야 할 점이다. 박석범



1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 그네, 1767년, 캔버스에 유채, 81x64cm, 런던 월레스 컬렉션
2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 빗장, 1777년경, 캔버스에 유채, 73x93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3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 도둑키스, 1787~1789년, 캔버스에 유채, 45x55cm, 성 페테르스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



정석범

미술사학자

sukbum@naver.com

프랑스 파리1대학 미술사학 박사, 현재 홍익대 대학원 출강.

저서로는 「어느 미술사가의 낭만적인 유럽문화기행」, 「아버지의 정원」 등이 있다.

“해외 싱크탱크와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해야”

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싱크탱크의 역할」

지난 4월 28일 KDI는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현오석 KDI 원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산제이 프라단 세계은행 부총재, 김만제 KDI 초대원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 창홍 페이 중국사회과학원 경제

연구소장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싱크탱크가 담당할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KDI의 미래발전 전략 수립을 논하는 자리로 기조세션을 포함해 4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현오석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KDI가 설립 이래 국가적 과제에 선도적 역할을 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한국이 G20 국가로 성장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의 교훈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연구 환경의 변화를 언급하며 “복잡한 도전과제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학제적 연구와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개도국에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을 전수하는 KDI ‘지식공유프로그램’ 등과 같이 각국 싱크탱크·정부 간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지식 교류와 연계를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조세션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산제이 프라단 세계은행 부총재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지식의 민주화’를 통한 ‘지식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변화를 촉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만제 KDI 초대원장은 KDI의 미래역할에 대해 “해외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산제이 프라단 세계은행 부총재가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KDI 원장(가운데)이 제3세션 'KDI의 과거와 미래'에서 토론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정기적 워크숍을 통해 사회 여러 분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1세션에서는 리처드 사만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장의 사회로 ‘급변하는 환경 속의 싱크탱크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레이몬드 스투릭 시카고 대학 국민여론조사센터(NORC) 선임연구위원은 싱크탱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독창적 주제 선정, 견실한 재정관리 등 7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발표를 통해 “성공적인 조직 관리가 제도적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과제의 발굴 및 다른 분야와의 원활한 조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롤랜드 빌링어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는 “급변하는 정책환경하에서 싱크탱크의 바람직한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 흐름을 주도적으로 선점하고 다양한 전문가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싱크탱크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들었다.

이숙중 동아시아연구원장은 “국책 연구기관이 정말 독립적인가?”란 질문을 던지며 비영리기관(NPO) 형태의 싱크탱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NPO 형태의 연구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며 재정적 문제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선도적인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주제로 시작된 제2세션은 독일, 중국 등 해외 연구기관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독일경제연구소 고문 로프 케츨러는, 베를린에 본부를 둔 독일경제연구소(DIW Berlin)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로서 연구 목표는 ‘성장과 변화’, ‘지속 가능성’, ‘배분’ 등이라고 설명했

다. 창홍 페이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장은 중국사회과학원의 규모, 설립 목표 등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사회과학원이 다루고 있는 연구주제는 무엇이나?”는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의 질문에 “여러 가지지만 최근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료개혁과 빈곤퇴치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타츠오 오야마 일본 정책연구대학원장은 일본의 싱크탱크를 정부, 은행, 보험·증권회사, 공익설비사업체, 정당 및 시민사회 관련 연구소 등 6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각 부처 소속의 정부 출연 싱크탱크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할 뿐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일본 내 싱크탱크들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KDI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KDI의 역할에 대해 “경제, 안보, 정치 등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국가전략원’의 설립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하기 위해 서울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앞으로 KDI가 “언론, 재계, NGO, 학계 등 여러 기관에 신경을 써서 보다 넓게 우리 사회와 소통을 하는 채널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제 간 연구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경제 분야를 모두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규모 리서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다른 싱크탱크와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경제

신지원 나라경제 인턴기자



금오산 정상에 오르기 전에 자리잡은 창사바위에 서면 경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과 마주할 수 있다.

옛 신라
불교의 숨결을
느끼다



경주에 가서 남산을 보지 않고 경주를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경주 남산에 오르는 것은 옛 신라의 속살과 맵시를 온몸으로 만나는 것이다. 경주시 인왕동과 내남면, 용장리에 두루 걸쳐 있는 남산(494미터)은 옛 신라 불교의 숨결이 가득한 불교문화의 노천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절터가 모두 147군데, 바위불상이 118기, 석탑 96기, 석등 22기를 비롯해 수많은 불교유물과 신라시대의 유적이 남산에 집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다.

특히 남산에는 마애불상이 많아 산 전체가 마애불의 보고나 다름없다. 이는 남산이 바위산이기도 하려니와 예부터 바위를 신성시해온 민간신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곳에 마애불을 비롯한 불상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7세기 초로 추정되며, 통일신라 이후 더욱 많은 불상이 새겨지고 석탑이 더해져 남산을 거대한 화엄세계인 불국토로 만들어갔다. 이처럼 가는 곳마다 불상이요, 석탑이요, 절터여서 산 전체가 보물이나 다름없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그 유례가 없다.

옛날에는 남산을 일러 ‘절집이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다’고 했다. 그 많은 절집은 이제 무수한 절터와 석탑, 석불로 남았다. 특히 남산 트레킹의 기본코스인 삼릉계곡에 마애불이 많은 편이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마애관음보살은 그 자태도 매력적이어서 ‘미스 신라’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이 마애불은 입술이 붉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색을 입힌 것이 아니라 붉은 빛이 감도는 돌 부분에 정확하게 입술을 새겼기 때문이다. 석가삼존불과 마애대좌불도 인근에서 만날 수 있다.

남산에서 만나는 마애불과 절집, 석탑은 남산의 자연과도 잘 어울린다. 절벽의 바위에는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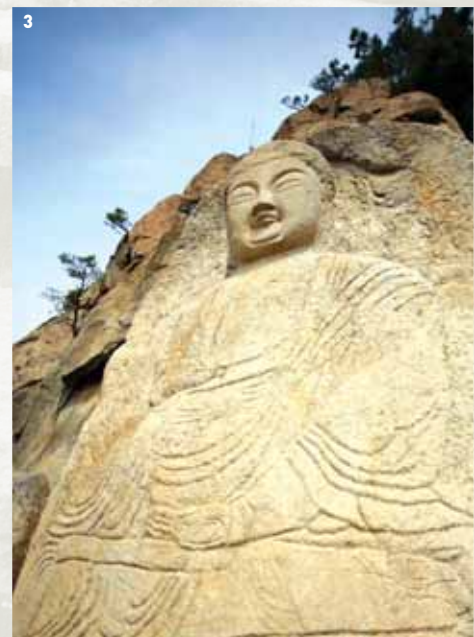


1



2

1 삼층석탑의 호사인 감은사탑. 13.4m로 국내 삼층석탑 중 가장 크며 절묘한 비례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2 돌기둥 같은 암벽에 새겨진 남산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입상. 키 154cm 여인의 형태인 불상은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세상을 내려다본다. 3 삼릉으로 오르는 길에 만나는 남산에서 두 번째로 큰 마애여래대좌불은 드라마 선덕여왕에 등장해 더욱 유명해졌다. 4 경주 남산은 수많은 등산로가 있다. 그중에서도 삼릉으로 오르는 길은 다양한 역사적 유물과 선암사를 거쳐 금오산 정상으로 오르는 가장 길고 매력 있는 코스다.



3

상이 있고, 편평한 터에는 절집이 있으며, 높은 봉우리나 언덕에는 석탑이 풍경의 일부처럼 들어앉아 있다. 일부러 절벽을 깎거나 터를 다져서 만든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곳의 바위불상을 두고 “바위에 불상을 조각한 것이 아니라 바위에 있는 부처를 들춰낸 것이다”라고 말한다.

사실 남산을 제대로 구경하려면 하루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발길 닿는 곳마다 절터가 있고, 석불이 있기 때문이다. 이왕에 남산을 둘러보았다면 삼층석탑의 백미인 감은사탑을 구경하는 것을 빼놓아서는 곤란하다.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에 있는 감은사터는 남산에서 다소 떨어져 있다. 신라 문무대왕과 그의 아들인 신문왕이 불력으로 왜구의 침입을 막고자 2대에 걸쳐 세운 것으로, 지금은 두 기의 감은사탑만이 옛 가람의 영화를 지키고 있다.

당시 문무대왕은 절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게 되자 바다의 용이 돼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바다에 장사지낼 것을 유언해 감은사에서 가까운 동해에 묻히게 됐는데, 신문왕(682년)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 했다고 한다. 신라시대 삼층석탑의 최대 크기로 알려진 감은사탑은 전체 높이가 13미터에 이르며, 통일신라 초기의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명지대 교수는 명작에는 해설이 따로 필요 없다며, 감은사탑에 이런 감탄사를 붙였다. “아! 감은사, 감은사탑이여. 아! 감은사, 감은사탑이여. 아! 감은사…” 나라경제

글 이용한 작가 / 사진 이상현 작가

길 위의 시인으로 지난 13년간 국내외 오지 혹은 섬을 떠돌며 글을 써왔다. 1995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했다. 시집 「만경, 후두둑 씨, 「정신은 아프다, 여행에서이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길 티베트 차마고도를 따라가다, 「바람의 여행자: 길 위에서 받아 적은 몽골」 등을 펴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다른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한 지인이 동네 치과에서 어금니 뿌리에 생긴 충치 치료를 했다. 의사가 미리 알려 주기를, 치료과정에서 부득이 신경을 건드려 이가 시리게 될 확률이 30~40%인데, 그때에는 신경치료를 하고 어금니 전체를 금으로 씌워야 한다고 했다. 치료 결과, 지인은 그 30~40%에 해당돼 상당한 지출을 했다. 치과의사는 최선의 치료를 했으나 워낙 충치 부위가 깊어 신경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결과적으로 그 치과의사는 단순한 충치 치료의 몇 배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을 얻게 됐다. 사람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동물이라면 그 의사 역시 고의로 신경을 건드려 추가 진료를 유발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그 유인의 실행을 막는 것은 의사의 도덕성과 적발 시의 처벌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의 경우 의사가 일부러 신경을 건드렸다 해도 이를 증명할 도리가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의 공정한 진료행위가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필자는 의료 인력을 신뢰한다. 그러나 견제장치 없이 전적으로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사회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양심을 믿지만 내·외부 감사를 통해 그들의 부패 가능성을 견제하고 있다. 국립과 학수사연구원과 경찰청의 양심을 믿지만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국과수의 소속을 경찰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약덕 진료의 가능성도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점심을 하며 동료 학자들과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와 같은 기존의 제도를 떠올렸다. 그러나 이는 과잉 진료, 의료비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부러 신경을 건드리는 등 적발하기 어려운 약덕 의사의 출현 가능성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진단만 하고 치료는 하지 않는 병원이 아이디어로 나왔다. 진단전문 병원은 진단과 치료를 겸하는 대부분의 병원들에게

견제장치가 될 거라는 논리다. 그러나 진단전문 병원 역시 과잉 진료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미묘한 약덕 진료는 막을 수 없다. 더욱이 진단만 하는 병원은 수익을 내기 어렵고 치료병원이 추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의료비

견제장치 없이 전적으로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사회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양심을 믿지만 내·외부 감사를 통해 그들의 부패 가능성을 견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약덕 진료의 가능성도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환자의 불편이야 본인 선택이니 논외로 한다 해도 말이다.

반복게임(repeated game), 즉 단골 병원을 만드는 것이 한 방안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단골이 될 수는 없는 노릇. 그때까지는 치료 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자는 것이 결론이었다.

“치료의 결과로 인한 추가 진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겠습니다.” 나라경제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2011. 4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전문직

병의원

학원

유흥주점업

예식장업 등

현금영수증!!!
정직과 성실납세의 증거입니다.

꼭 챙기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2011년 2월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제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에 대한 안내

-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대상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 포함), 무도유흥주점

- 미발금액 신고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건당 최고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부여

신고방법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 부과(2011년 4월부터)

인기연예인
김정은



함께 만들어!
대한민국세미래
선진세무제를 만드는 정책하고 아름다운 미래

세미래콜센터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NTS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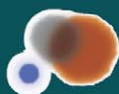
추억도 이제는 녹색입니다

지난 여름 아름다운 강변 여행,
기차 타고 만나는 녹차밭
가족과 함께 떠난 걷기여행...
추억 하나 하나로 녹색의 아름다움을 채워갑니다.

**녹색관광으로 행복한 여행길,
녹색성장의 지름길을 만들어주세요!**

녹색관광이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 관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